



수시 | 19-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Policy Direc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Urban Sector for Implementing SDGs

박세훈, 이병재, 안예현, 유희연, 이은우, 권구순, 김유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Policy Direc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Urban Sector for Implementing SDGs

박세훈, 이병재, 안예현, 유희연, 이은우, 권구순, 김유식

■ 연구진

박세훈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혁신센터 소장(연구책임)

이병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예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희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은우 국토연구원 연구인턴

권구순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유식 (사)한국해비타트 팀장

■ 연구심의위원

정진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범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용한 국토·도시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2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기재부의 EDCF와 KSP, 외교부의 KOICA, 국토부의 인프라 ODA로 나누어져 있으며,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가 부족
- 3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타공여국에 비해 인프라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제도 구축·역량개발의 비중이 낮고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이 국내 기업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 4 향후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용하고 지식공유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보편적,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1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해 3대 정책기조 전환 제안 : ① 국익중심에서 국익과 국제사회 기여의 조화로, ② 하드웨어 중심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로, ③ 단위사업 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 지원으로
- 2 3개 추진방향 제안 : ① 「2030 의제」 체제의 적극적 수용, ②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재구축과 활용, ③ 국토·도시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대
- 3 7개 세부정책과제 제안 : ①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전략 마련, ②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전략 수립, ③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연구 기획 추진, ④ 한국의 국토발전경험을 활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추진, ⑤ 국제기구의 국토·도시분야 의제설정에 참여 확대, ⑥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협력사업 활성화, ⑦ 「국토·도시 개발협력 연석회의」 개최

차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4. 연구의 기대효과	10

제2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개발협력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토·도시 정책	15
2. 국제사회 개발협력 동향과 국토·도시 정책	24

제3장 국제기구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추진동향

1. 유엔 해비타트	35
2. 세계은행	40
3. 아시아개발은행	44
4.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48
5. 종합 및 시사점	51

제4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흐름	57
2.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구조	64
3. 주요 프로그램별 특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	68
4. 종합 및 시사점	81

제5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사업특성

1. 국제비교 분석	87
2. 국내 사업프로그램 기반 분석	91
3. 종합 및 시사점	106

제6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1. 기본방향	111
2. 세부 정책과제	115

참고문헌	123
------------	-----

부 록	129
-----------	-----

1

CHAPTER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9
- 4. 연구의 기대효과 | 10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국토·도시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이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
 - 유엔은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종료 이후,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2016-30)를 채택하였으며, 그 중 하나의 목표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의 조성’ (목표 11)을 제시
 - 유엔인간정주계획(UN Habitat)은 해비타트 III 대회(에콰도르 키토, 2016)를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국제사회의 도시정책 규범으로 제시
- 국토·도시 분야 한국의 ODA는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한국개발경험 공유 및 협력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ODA 규모는 2013년 1조 9,214억 원에서 2018년 3조 482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와 연계된 유·무상 사회 인프라 지원은 2014년 약 9700억 달러로 전체 ODA의 42% 해당¹⁾

1) <http://stats.oecd.org/>, (최종접속일 2016.10.17.)

-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25억 명의 도시인구가 증가하며 그 중 90%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도국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 외곽의 난개발, 주택부족, 환경파괴 등 도시문제를 경험하고 있음(UN Habitat, 2016b)

- 한국은 개발 시기에 걸쳐 급속한 도시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국토 및 도시정책 경험 공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도 증가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한국의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원조 전략 수립 필요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총괄계획(「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토·도시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계획과 전략은 부재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 F(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토·도시분야에 대한 체계화된 전략은 마련되지 않음

- 국토·도시분야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산업 지원, 스마트도시 수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하며, 단기 개발사업 중심,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규범과 괴리되어 있음

□ 그간 산발적, 단편적으로 진행된 우리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을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공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원조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경제적 이해 중심, 개별프로젝트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의 기초 정립

-
- 한국의 개발경험과 국토·도시정책의 고유성과 특징점을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개발협력의 자원으로 활용
 - 사업방식도 양자사업 중심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

2) 연구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새로운 도시의제(NUA) 등 국제사회의 국토·도시분야 정책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정립
- 국내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정책방향 제안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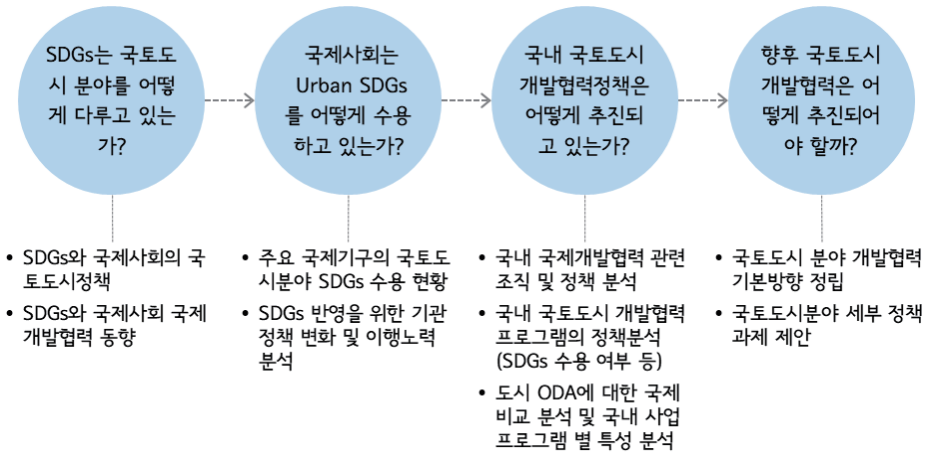
- 국제사회의 변화는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립 이후를 집중적으로 검토
- 국내 정책기조분석 및 개발협력 사업분석은 우리의 공적개발원조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2010년 이후를 대상으로 함
 - OECD DAC 가입(2009년 11월),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2010년) 등

□ 내용적 범위

-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공적개발원조 정책 동향 분석

- 국제기구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추진동향 분석
-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정책 기조 분석
-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사업 특성 분석
-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제안

그림 1-1 | 연구의 주요 질문과 흐름



자료 : 저자작성

2) 연구의 방법

□ 문헌 분석

-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 정책 동향 분석 (국제기구 합의문, 연구논문 등)
- 국제기구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추진동향 (국제기구 발간자료 중심)
- 국내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 분석 (정부 정책문서, 보도자료, 기관 발간자료 등)

□ 외부 전문가 협력

-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연구 전문성 제고
 - 권구순(고려사이버 대학), 김유식(한국 해비타트)과 「우리나라 국토도시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추진방향 제언」 공동연구 수행
- 자문회의 개최 :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부록 1> 참조)

표 1-1 | 자문회의 개최 개요

제목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자문회의
일시 / 장소	2019년 11월 14일 / 서울역 공항철도 Arex-3 회의실
자문위원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 송재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 성장환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외연구센터 센터장) • 이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 저자작성

□ 한국 국토발전 경험에 대한 국제 워크숍 개최

- 국내외 한국 ODA 및 국토·도시정책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 국토·도시개발 경험의 특징과 그것이 국제개발협력에 갖는 시사점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논의
- 한국의 국토·도시개발경험을 분야별로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성찰(지역개발정책, 신도시개발, 주택재개발, 토지개발, 국토관련 기관 및 제도 구축, 지역사회의 역할 등 검토)

표 1-2 |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국제워크숍 개최 개요

제목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재성찰(Reconsidering Korean Urban Development Experiences: Implic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시 / 장소	2019년 8월 28-29일 / 서울 코리아나 호텔
주요 참석자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하성규 (전 중앙대 교수, 현 주택관리연구원 원장), 주유민 (싱가포르대학 교수), 박세훈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김원배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Mike Douglass(전 하와이대 교수), Jamie Doucette (맨체스터 대학 교수), 신현방 (런던정경대학 교수), Cuz Potter(고려대학교 교수), Blaz Kriznik (한양대학교 교수) 등

자료 : 저자작성

□ 국제회의의 참석을 통해 국토·도시분야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

- 제7차 Asia Pacific Urban Forum 참석(2019년 10월 14~17일)
 - UNESCAP, UN Habitat, Urbanice Malaysia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행사로 10월 15-17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
 - SDGs 이행을 위한 도시 차원의 노력으로 「페낭 지속가능도시화 플랫폼」 구축
 - 대회 참석을 통해 UNESCAP, UN Habitat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근 SDGs 이행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 파악
- EAROPH 집행위원회 대회 참석(2019년 10월 14일)
 - EAROPH(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lanning & Human Settlements)는 다부문, 비정부 민간기구로 지역 내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의 경험공유를 위해 설립 (EAROPH, 2019)²⁾
 - 2019년 10월 14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국제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역내 국가들의 경험 교환

2) EAROPH 홈페이지: <http://earoph.org/> (최종접속일: 2019.11.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기존의 관련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새로운 도시의제(NUA)」의 의미 및 국내 도시정책에의 적용방안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1-3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해비타트 III 의제(The New Urban Agenda) 이행방안 연구 • 연구자: 국토교통부(2017) • 연구목적: 의제 주요내용 분석 및 국내 도시정책과제 도출, 의제 이행 추진체계 제안	- 통계자료 및 문헌조사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전문가 그룹 협력 - 국제기구와의 협력	- 의제 의의 및 주요내용 - 의제 내용분석 및 세부정책과제 도출 - 의제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 - 의제와 국내 도시정책 개선과제 - 의제 국내 이행방안
	2 • 과제명: 한국의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역할 • 연구자: 권구순·김유식(2016) • 연구목적: SDSs 및 NUA 간 상호 연계성 분석, 국내 민관영역 도시화 국제개발협력 방향성 제시	- 문헌 조사 - 사례 분석	- SDGs와 NUA 상호연계성 - KOICA 도시 분야 ODA 현황 및 문제점 - 한국해비타트 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3 • 과제명: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의 성립배경과 의의 • 연구자: 박세훈(2016) • 연구목적: 새로운 도시의제 특징 및 한국 도시 정책에 갖는 시사점 파악	- 문헌 조사 - 전문가 자문 및 원고 의뢰 - 정책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 국제기구와의 협력	- 새로운 도시의제 주요내용 및 특징 - 새로운 도시의제 성립배경 -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론적 배경 - 한국 도시 및 도시정책 시사점 고찰
본 연구	• 과제명: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방향 연구 • 연구목적: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 마련 및 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실행방안 구체화	- 문헌 분석 - 관련 전문가 인터뷰 - 국내외 전문가 워크숍 개최 - 해외 전문가 공동연구 - 국제기구 담당자 의견 청취	-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 정책 동향 분석 - 국제기구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추진동향 분석 - 기존 국내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 분석 -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정책방향

-
-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정책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전략에 대한 연구,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 등
 - 국제사회의 논의를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전략과 연계한 연구는 취약

□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도시정책 흐름에 비추어 우리 정책경험을 평가하고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4.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국내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체계적 전략 마련을 통해 원조 효과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 및 국제사회에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
- 유엔 해비타트 등 국제기구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노력에 한국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학술적 기대효과

- 한국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의 특수성, 추진주체간 이해관계, 향후 추진전략 등에 대한 학술적 토론의 기반 마련
- 국토·도시분야 한국 발전경험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발전

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대

- 향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제개발협력학회 등과 연계하여 학술토론회 등 개최를 통해 연구 결과 공유·확산



CHAPTER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개발협력

-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토·도시 정책 | 15
- 2. 국제사회 개발협력 동향과 국토·도시 정책 | 24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개발협력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토·도시정책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립

□ 성립배경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는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가 2015년 말 종료됨에 따라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목표로 채택됨
 - MDGs 이후 새로운 국제사회 개발목표 수립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SDGs 가 2014년 9월 UN 총회에 제안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2015년 7월까지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됨(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8)
 - 2015년 9월 개최된 정상회의(UN Summit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서 SDGs 가 포함된 「2030 의제(The 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 2016년 1월 1일 발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8)
 - MDGs를 승계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지침으로 역할 수행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기존 MDGs의 빈곤퇴치 기조와 함께 포용성(inclusiveness), 보편성(universality), 평등(equality) 등의 새로운 기조가 강조되고, 사회발전, 경제성장의 지속, 환경보전에 대한 목표가 강화됨
 - 원칙(principle)은 ‘한 사람도 뒤쳐지지 않는 것(Leaving No One Behind)’ :

MDGs 패러다임에서 빈곤을 지역적으로 부분 달성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빈곤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 문제도 강조

- 소외된 계층, 최빈국, 내륙국, 군서도서국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촉구함
- 기존의 MDGs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선진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목표를 수립하여 보편성을 추구

표 2-1 | MDGs 및 SDGs 비교

구분	MDGs	SDGs
목적	사회 및 경제개발	포용적 경제성장, 사회발전, 지속가능한 환경, 평화, 안보
핵심 목표	빈곤퇴치	빈곤퇴치 및 불평등 완화
주요 대상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재원	ODA 중심	당사국 기금, ODA, 민간재원(투자, 교역)
수행주체	공여국과 수원국 관계 중심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조
기업참여	기업의 참여 기회 제한적	기업의 참여 기회 대폭 확대

자료 : 권상철·박경환(2017: 77)

□ 주요 내용과 이행 노력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 17개 목표(goal), 169개 세부목표(target)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목표 간 통합과 균형을 강조함
 - 17개 목표는 ① 빈곤퇴치, ② 기아 및 농업, ③ 건강, ④ 교육, ⑤ 양성 평등, ⑥ 물, ⑦ 에너지, ⑧ 경제, ⑨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화, ⑩ 불평등 해소, ⑪ 도시와 거주지, ⑫ 소비 및 생산양식, ⑬ 기후 변화, ⑭ 해양자원, ⑮ 육상 생태계, ⑯ 사회 및 제도, ⑰ 글로벌 파트너십
 - 국토·도시분야는 11번 목표를 중심으로, ⑦ 에너지, ⑨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화, ⑬ 기후 변화 등과 관련이 있음
- 선진국이 개도국을 도와야 한다는 기존의 북-남 시각에서 벗어나 신흥국 등과의 협력을 포괄하는 남-남 협력 및 민간의 역할을 강조(국토교통부, 2017:15)
 - 정부 외 NGO,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비정부기구도 중요한 참여주체로 인식

그림 2-1 |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



자료 :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01/L01_S05_02.jsp0,
(최종접속일: 2019.10.11.)

- 「2030 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무를 명시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예산 배정, 역량강화, 필요한 기술의 이전 등
 -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의 확대(선진국의 GNI 대비 ODA 비중 0.7% 달성, 최빈국에 대한 0.15~0.2% 달성) 약속의 재확인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자원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과 공공의 자원조달 추구 필요성 제시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및 리뷰 추진
 - 체계적인 점검과 리뷰 보고서 제출 및 이의 확인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 HLPF)을 개최
 - HLPF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으로 매년 자발적 국별 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 VNR)를 실시하여 참여국에 대한 모든 SDGs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및 달성 점검을 위한 241개 지표는 제 71차 유엔총회('16년 9월

19일)에서 확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9)

- 또한 SDGs 원활한 이행을 위해 파리협약, 센다이 재해위험저감 강령 등 타 국제논의와 방향성을 일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윤유리, 2018:3)

표 2-2 | SDGs 이행 관련 주요 국제 합의 및 협약문

분 야	내 용
건강 및 먹거리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로마 영양에 관한 선언 및 행동계획'('15년 12월)
생산/소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패턴 10년 프로그램'
기후 변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제21차 UNFCCC 파리 협약문'
생태 환경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BD), '2011~2020 생물 다양성 아이치 목표'
도 시	유엔 해비타트, '새로운 도시의제'('16년 10월)

자료: 윤경호(2016)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년~30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
 -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 발전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 2016년 수립된 제3차 계획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핵심 목표로 반영
- 우리나라는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 국무조정실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관련이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지속가능발전목표 주류화를 위해 노력 중(통계청 통계개발원, 2016: 45)
 - 위의 4개 부처는 기존 정책과 법률을 대상으로 SDGs 달성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 한국 국가 맥락에 맞는 SDGs 세부목표 수립 계획
 - 그러나 유엔의 공식적인 채널은 환경부로 되어있는 반면,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제출한 부서는 외교부로 SDGs 이행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표 2-3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별 주요 법률, 계획 및 부처

목표	주요 법률	주요 계획	주요 부처
1. 빈곤퇴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제1차 기초생활보장3개년 계획(18-20)	보건복지부
2. 기아종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15-1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3. 건강과 먹거리	국민건강증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16-20)	보건복지부
4. 양질의 교육	교육기본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평생 교육법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2-)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13-17)	교육부, 고용노동부
5. 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6-25)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3-17)	여성가족부
6. 깨끗한 위생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5 전국수도종합계획(16-25)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16-25)	환경부, 국토교통부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14035)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4-35)	산업통상자원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미수립) 고용정책 기본계획(미수립)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국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 지역산업 진흥계획(시도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10. 불평등 해소	차별금지 관련 법률	분야별 차별금지 및 약자보호 관련 계획(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도시계획(광역시, 시군)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	국토교통부, 환경부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 기본계획(수립 예정)	환경부
13.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18)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7-36)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14. 해양생태계 보존	해양환경관리법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11-20)	해양수산부
15. 육상생태계 보호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16-25)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14-18) 제1차 산지관리 기본계획(13-17)	환경부, 산림청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청탁금지법	-	법무부

자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2017) 31-32쪽을 토대로 재구성

2)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국토·도시정책 내용³⁾

□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목표 11)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핵심목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으로 제시됨
 - MDGs 에 비해 SDGs는 도시 문제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격상시키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이슈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도시의 역할과 잠재성에 주목
 - MDGs 에서는 도시 관련 목표가 ‘목표 7 : 환경의 지속가능성 추구’ 하위목표(7.D)로 다루어졌던 반면, SDGs 에서는 독립된 목표로 설정되어, 과거에 비해 도시정책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행동을 촉구(정지원·송지혜, 2014: 42-45)
- 목표 11 은 주택, 대중교통, 도시계획, 자연 및 문화유산, 재난 및 재해, 환경, 공공 공간 및 녹지 환경 등 도시 분야 주요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부 전략으로 7개의 실행목표(action target 11.1~11.7)와 3개의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11.a~11.c)을 제시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도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
 - 도시는 매우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SDGs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기술 및 데이터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윤유리, 2018: 5)
 - 향후 국제기구의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홍나미, 2017: 130).

3)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국토·도시분야 내용은 어느 한 영역으로 한정할 수 없다. 특히 수자원(목표 6), 에너지(목표 7), 사회인프라(목표 9), 지속가능도시(목표 11), 기후변화(목표 13)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목표를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분리해서 다루어 질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목표 11을 국토·도시분야를 대표하는 목표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표 2-4 | SDGs 도시 관련 목표 (SDG 11)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하고 도시 불량주거지 개선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 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리 증진
11.4	전 세계 문화와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강화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11.6	2030년까지 대기 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법 제공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 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계성 강화지원
11.b	2020년까지 통합, 효율적인 자원 활용,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지향하는 통합정책과 계획이 반영되고 적용된 도시 및 정주지의 수를 증가시키고 센다이 체재의 후속 논의에 발맞추어 모든 관리수준에서 통합 재난 위험관리 체제를 개발하고 실행
11.c	지역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을 구축함에 있어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통한 최빈 개발도상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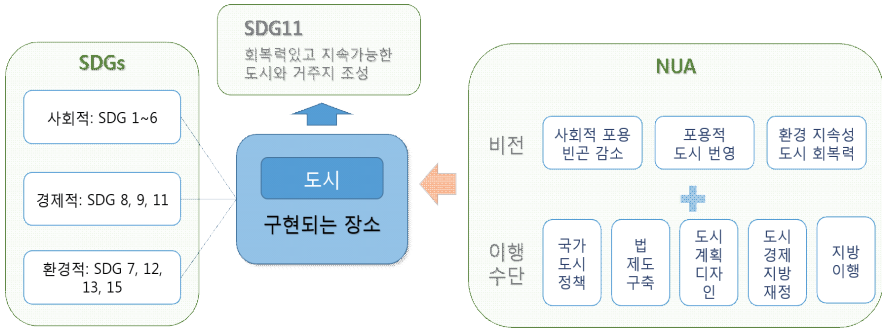
자료: 손동필·오성훈(2016: 48-49)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새로운 도시의제(NUA)의 성립과 주요내용

- 유엔해비타트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을 구체화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를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채택
 - NUA는 SDGs를 도시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합의문(UN-Habitat, 2016)이자 SDG 11의 실천계획
 - 도시를 단순한 정주공간이 아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적 현안의 해결책이자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실천방안 논의
- NUA는 SDG 11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도시 및 정주공간과 관련된 더욱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음

- 특히 SDG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도시정책과 법, 공간계획, 지방재정 프레임워크 등 이행수단 또한 포함하고 있음

그림 2-2 | SDGs와 「의제」의 연계 개념



자료: 저자작성

- NUA는 ‘모두를 위한 도시’ (cities for all)를 핵심가치로 하는 17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 ‘모두를 위한 도시’는 ‘기존의 도시의 정주환경과 주거권을 강조하던 이전과 달리 도시를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인식(이유경 외, 2018: 92)
 - 「새로운 도시의제」(NUA)의 핵심가치로 도시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해야 하며(포용성), 이질적 요소들이 서로 결합될 수 있는 혁신을 육성할 수 있는 있어야 하며(혁신성), 도시발전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조율과 협력의 중요성(통합성)을 강조(박세훈 외, 2017: 20-21)
- NUA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NUA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유엔 해비타트는 「도시 및 지역계획 국제가이드라인(International Guidelines on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2015)을 발간하여 개도국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
 - 2017년 유엔 해비타트는 「NUA 이행을 위한 실천 프레임워크」를 발간하여 NUA 이행 가이드라인 제시

- 유엔 해비타트, OECD, Cities Alliance는 공동으로 NUA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NUPP) 추진 중

표 2-5 | 새로운 도시의제(NUA)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에 대한 키토 선언	서문 (1~10)	· 세계 도시인구가 205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도시화는 도전과 기회를 함께 노정함 ·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불평등, 사회경제적 배제, 환경의 질 저하를 불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도전을 제기 · 이 도전과 기회는 NUA가 제시하는 도시계획, 설계, 재정, 개발, 거버넌스, 관리 등에 의해 대체되어야 함
	공유된 비전: 원칙과 약속 (11~15)	· 도시와 거주지는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로 표현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함 · 이는 적정주거에 대한 권리, 근원적 자유,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시민적 체제, 성적평등, 모두를 위한 이동성 보장, 재난관리와 회복성, 지속가능한 소비를 포함 ·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계획 및 설계,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시민과 이해당사자 참여 등이 도시 패러다임 진화의 핵심요소
	실천을 위한 요청 (16~22)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공동의 비전과 정치적 약속은 국가의 서로 다른 현실, 발전단계, 역량을 고려하며, 각 국가가 처한 고유한 요건을 존중함 ·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슬럼과 비공식 거주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NUA는 급속하게 도시화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도시와 거주-그리고 거주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역사적 기회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키토실행 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약속 (23~80)	· 사회적 포섭과 빈곤근절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18개 항목): 토지보유, 공공공간의 가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변영 및 모두를 위한 기회(20개 항목): 주택 및 경제개발의 영향, 지식·기술·교육에 대한 접근, 투자촉진, 혁신과 기업가 정신 등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발전(18개 항목): 기후변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슬럼개선, 에너지 효율화, 토지의 사회적·생태적 기능 등
	효과적 집행 (81~160)	· 효과적인 도시 거버넌스 구축(8개 항목): 포용적 집행가능한, 참여적 정책을 통해 NUA를 집행해야 함.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할만한 재정 및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중앙과 지방의 정부 간 협력이 요구됨 · 도시공간발전에 대한 계획과 관리(33개 항목): 단기적 수요와 장기적 목표 사이의 균형있는 통합적 계획, 먹거리 안정성, 도시와 지역 간 연계, 양질의 공공 공간, 도로안전,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이동성 · 집행수단(35개 항목): 다양한 행위자 참여와 수단의 활용이 요구됨, 역량개발, 협력, 재정자원의 동원, 정치적·법적 체계 등이 중요
	후속조치와 리뷰 (161~175)	· NUA 와 그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영향평가, 효과적·시의적절한 집행,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후속조치 및 리뷰 · 회의와 컨퍼런스를 포함하여 양적·질적 분석, 정기적 평가 필요 · NUA 후속조치 및 리뷰는 그 집행의 일관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함

자료: 박세훈 외(2016)

2. 국제사회 개발협력 동향과 국토·도시정책

1) 국제사회 개발협력 여건 변화

□ 2030 지속가능발전 체제 출범에 따라 개발의제의 확대

- 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2015) 이후 '16-'30년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할 개발목표 마련
 - '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공식 채택
- MDGs는 절대빈곤퇴치, 교육, 보건, 양성평등 등 사회개발위주의 의제였으나, SDGs는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 등으로 개발의제 확대
 - 개발협력의 범위와 유형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

□ 기존 원조성과에 대한 반성

- 1980년대-90년대 '원조피로(Aid Fatigue)현상'을 경험하고, 원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등장(한국국제협력단, 2008: 63-64)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여 년간 지속적인 원조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
- 2003년 로마 제1차 원조조화(aid harmonization) 고위급 회의 이후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

□ 서구 선진공여국의 ODA 증대 여력 한계와 원조 주체 및 방식의 다양화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OECD 주요 회원국의 개발협력 예산이 동결·감축되고 있으며,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의 중요성 부각

- 신흥 공여국의 역할 증대, 개발협력 전반에 민간부문 참여 확대, 무역을 위한 원조확대 등으로 개발협력의 방식과 참여자가 확대
- 수원국에게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서 개도국의 주인의식(ownership) 강조

2) 국제사회 개발협력분야 주요 쟁점

□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 2003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1차 원조조화(aid harmonization) 고위급 회의에 이어 200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됨
 -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채택 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5개 원칙(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성과중심 관리, 상호책무성)을 제시하고, 목표지표, 성과지표 등을 결정
- 2008년 제3차 고위급 회의에서 파리 선언의 진척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파리 선언을 더 심화시키고 이행을 촉구하는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을 채택함
-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평가 및 MDGs 달성을 위한 원조효과성 점검을 위한 마지막 고위급 회담이 2011년 한국 부산에서 개최
 - 원조의 효율적 전달체계를 중시하는 ‘원조효과성’에서 성장과 빈곤감소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개발효과성’으로 논의의 패러다임 변화(임소진, 2012: 20-21))
 - 개발효과성은 개발협력의 절차보다 실질적 결과를 중시하며, 인권, 젠더, 환경 등 범분야적인 아젠다와 시민단체와 기업 등도 참여하는 포괄적인 국제개발협력 체제 강조(손혁상, 2013:10)

표 2-6 |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국제회의 및 내용

회의	합의문	주요 내용
제1차 원조조화 고위급 포럼 (2003년, 이탈리아 로마)	「로마 선언문」	• 원조 조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모범관행 적응계획 마련 • 원조 조화는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이 원조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원국과 공여국 간, 공여국 간 원조정책, 절차, 예산 등을 조정하는 것
제2차 고위급 포럼 (2005년, 프랑스 파리)	「파리 선언」	• 원조의 질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 • 협력국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이 빈곤감소, 제도개선, 부패 척결을 위해 자체 전략을 수립 • 원조일치(aid alignment):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정책이 일치 • 원조조화(aid harmonization): 공여국은 원조중복 방지를 위해 정책조화를 이루고 절차를 간소화함 • 성과 지향적 관리(management for results): 개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를 측정 • 상호 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공여국과 수원국은 개발성과에 상호책임이 있음
제3차 고위급 회의 (2008년, 가나 아크라)	「아크라 행동계획」	• 새로운 이행약속이 아닌 파리선언 이후의 이행해야할 사항을 점검, 향후 방향 등을 제시
제4차 고위급 회의 (2011년, 한국 부산)	「부산 선언문」	• 개발협력 분야의 최고위급, 최대 규모의 회의로 진행 • 기존 파리 선언에서 수립 되었던 원조효과성 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 및 공유, 포괄적 개발효과성 관련 의제, 부산총회 이후 의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기존의 원조 효과성 논의를 넘어 효과적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를 도출, 신흥국,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가 참여하는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조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8) 120쪽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개발재원의 확대 및 다양화

- SDGs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개발재원의 필요성이 강조됨 (오수현·이인호, 2018: 4).
 - 추가적인 개발자원 확보를 위해 공적 개발원조(ODA)의 전략적 활용과 민간 부분의 역할을 강조
 - 제3차 유엔개발자원총회(에티오피아, 2015)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은 개발자원 확대 조성을 위한 민간 재원의 중요성 강조(정지원 외, 2018: 30)

-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으로 개발재원의 공급·활용의 책무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강화
 -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OSSD) 등 ODA 뿐만 아니라 개발 촉진 및 글로벌 도전과제 지원 목적의 모든 공적 개발재원을 포함함(정지원 외, 2018: 22)
 - 2018년 이후 OECD는 ODA 측정방식을 기존의 순지출(Grant Element)에서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방식으로 변경(주유선, 2019: 13)
-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OSSD) 지표를 통해 SDGs 체제 하에서 공여국의 개발재원 동원 확대
 - TOSSD는 기존의 ODA에 비해 비양허성 차관 및 민간재원등의 다양한 주체와 금융수단을 포함하며, 동시에 기존 ODA의 목표인 빈곤종식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인권, 국제이주, 평화 및 안보 등의 목표를 포괄하는 재원을 의미(정지원 외, 201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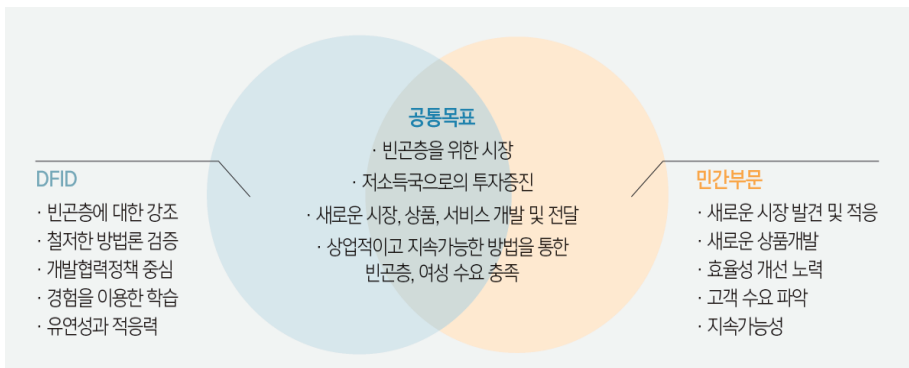
□ 개발협력 전략에서 국익(national interest)의 부상⁴⁾

- 최근 OECD DAC 회원국 중심으로 개발협력정책에 국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음
 - 2017년 11월 OECD DAC 평가네트워크 회의에서는 ‘이타주의에서 국익으로(From Altruism to National Interest)’라는 제목의 안건이 상정
 - 이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선진 공여국들이 개발협력 예산을 확대하기 어려워진 점, 개도국에 대한 자금 흐름 중 해외투자금액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 등을 반영함
 - 이에 따라 국익과 개발협력을 연계하는 수단으로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의 중요성 부상

4) 이 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2017c)의 내용을 기초로 하였음

- 네덜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개발협력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네덜란드 기업을 주요 원조 파트너로 명시(한국수출입은행, 2017c:3-5)
 - 2013년 새로 제시된 개발협력 목표는 1) 절대빈곤 감축, 2)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3) 해외에서 네덜란드 기업의 성공으로 선언
 - 인프라 개발 및 개도국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접근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환경 개선에 PSD 지원을 집중하고, 이에 네덜란드 기업의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 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함
- 영국은 2015년 11월 원조 목표를 재설정하면서 ‘국익 안에서 글로벌 과제 해결’ 을 목표로 제시하고, 원조가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국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함(한국수출입은행, 2017c:3-5)
 - PSD를 통해 개발협력과 민간부문의 공동목표 추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
 - 자국의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빈곤층을 위한 시장개척, 상품개발, 저소득국의 투자 유치 등에 집중,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개도국의 시장경제를 활성화 도모 추진

그림 2-3 | 영국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7c)에서 재인용

3) 국제사회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추이

□ 국토·도시부문의 중요성 증대

- 2030년 아젠다를 전후하여 국제사회에서는 국토 및 도시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는 각종 국제합의문에 반영됨
- 도시는 빈곤, 기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노력에 장애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엔진이 될 수 있음을 인식
- 최근 도시관련 국제협약은 샌다이 재난위험저감 프레임워크(2015),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2015), 지속가능발전목표(2015), 기후변화 파리협약(2015), 새로운 도시의제(2016)로 이어짐

□ 국토·도시부문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

- 샌다이 재해위험경감 프레임워크 :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특히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구체화
-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개발금융을 모색하고,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 강조
-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제시하였으며, 그중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가 11번 목표로 명시됨
- 파리 기후변화 협정 : 전 세계가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약속하였으며, 도시정부의 역할 강조
- 새로운 도시의제 : “모두를 위한 도시” 조성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핵심적 요소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 도시화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

표 2-7 | 국토·도시부문 국제협약 주요 내용

주요협약	연도	발표	내용
센다이 프레임워크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2015년 3월	유엔 재해경감 기구	• 지방정부, 민간분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재해경감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인정 •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의 역할, 건축법(building codes), 환경 자원 관리 법규 제정의 중요성 강조 • 프레임워크 실행 지원을 위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기타 관련된 지방정부기관의 역할 강조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Addis Ababa Action Agenda	2015년 7월	제3차 개발재원 총회	• 글로벌 지속가능 아젠다 지원을 위한 신(新)금융구조 필요성 강조 • 개발도상국 인프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연간 1~1.5조 달러 확보 • 지방정부의 역할 및 국내공공재원, 국내민간재원, 해외민간재원, 해외개발협력의 필요성 강조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년 9월	2015 유엔총회	• MDGs와 달리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빈곤 근절, 보편 초등 및 중등교육 확대 등을 위한 목표 수립 • 목표 11에서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을 계획 • 목표 11에서는 개발 및 도시가 전 세계로 당연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도시화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식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34개 통계지표 중 대부분은 도시 차원이며, 전체지표 중 1/3은 국가수준보다는 지역수준에서 측정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 회의	• 전 세계 기후 상승을 1.5~2°C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의 온실가스배출수준을 감소를 약속 •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협정거부로 인해 파리협정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지역 수준에서의 행동의 중요성을 나타낸 협약으로 평가 • 일부 과학자들은 전체 탄소배출량의 70% 이상 도시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감안하면 훨씬 이상일 것으로 예상
새로운 도시의제 New Urban Agenda	2016년 10월	유엔 해비타트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20년 비전 계획 • SDGs의 목표 11 이행을 위한 기존 3개 협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대응,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도시의 역할 증대를 목표 • 컴팩트시티(Compact cities), 다중심적개발(polycentric growth), 대중교통중심(transit-oriented) 개발, 공공공간의 확보 등을 강조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각과 정치적 이행을 촉구

자료: UNESCAP(2019b) 34~35쪽에서 재구성

그림 2-5 | 국토·도시부문 국제협약 흐름



자료: UNESCAP(2019b) 35쪽에서 발췌

3

CHAPTER

국제기구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추진동향

1. 유엔 해비타트 | 35

2. 세계은행 | 40

3. 아시아개발은행 | 44

4.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 48

5. 종합 및 시사점 | 51

국제기구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추진동향

1. 유엔 해비타트

1) 배경 및 동향

- 유엔 해비타트(UN-Habitat)는 유엔기구 내 인간 정주 및 도시 분야를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 해비타트 회의를 통해 인간정주 및 도시화 이슈에 대한 글로벌 의제를 주도
 - 유엔 해비타트는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 (1978년 설립)
 - 해비타트 회의는 20년을 주기로 개최되며 글로벌 도시의제를 확인하고 국제적인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
 - 해비타트 I은 76년 캐나다 밴쿠버, 해비타트 II 는 터키 이스탄불, 해비타트 III는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
 - 시기별로 인간 정주 및 도시화에 관한 상이한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점차 ‘주거권’에서 ‘도시권’으로 이슈가 확대되어 옴(박세훈 외, 2016:18)
- 유엔 해비타트는 2016년 해비타트III 대회를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여 글로벌 도시정책의 방향을 제시
 - 새로운 도시의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1을 구체화하고 세부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지님
 - ‘모두를 위한 도시’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 포용, 경제

적 기회의 확대, 환경의 보전, 집행전략 등을 제시

□ 「새로운 도시의제」 채택 이후 이의 이행을 위해 기관 차원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도시정책 프로그램 구축 등의 활동 추진

-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0-25)」은 효과적인 SDGs 및 NUA 이행을 위한 유엔 해비타트 차원의 단기적 목표로 2019년 5월 제1회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채택 (UN-Habitat, 2018)
- OECD, Cities Alliance와 함께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을 추진하여 협력국의 국가도시정책 수립을 지원

□ 또한 SDGs 11 및 NUA 이행 여부를 연차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 발간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 SDGs 및 NUA 이행과 관련한 도시번영지수(City Prosperity Index)는 도시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표준화된 지표와 방법론을 제공

2) 「전략계획 2020-25」의 주요 내용

□ 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5」는 SDGs 기본원칙과 목표를 준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기본원칙) SDGs 와 동일한 “leaving no one is behind” (누구도 소외받지 않을 것)를 제시하고 있음
- (사업목표) “개발과 평화의 동력으로서의 지속가능 도시화” (Sustainable urbanization is as advanced as a driver of development and peace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for all)

표 3-1 | 「전략 계획 2020-2025」 추진전략

구분	결과	SDGs 및 NUA 관련성	UN 협력기구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소	1. 기본 서비스로의 평등하고 증대된 접근성,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및 공공 공간	SDGs 1, 3, 4, 6, 9, 10, 11 NUA 29,30, 34, 37, 74 문단	UNICEF, UN-Women, UNEP, UN 마약범죄사무소
	2. 토지와 적정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강화	SDGs 1,2,5, 11 NUA 35 문단	세계은행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3. 효과적인 거주지 성장 및 재생	SDGs 4,6,11,16 NUA 38 문단	UNESCO, UN 자본개발기금(UNCDF), 국제이주기구(IOM), 세계은행
도시 및 지역의 공동번영 강화	1. 공간적인 연결성 및 생산성 향상	SDGs 1,2,8,9,11,12,14 NUA 49, 51, 52 문단	UNDP, UNIDO, ILO, IOM
	2. 지방 재정수입 증가 및 공평한 분배	SDGs 8, 11, 17 NUA 67, 75 문단	UNCDF, IOM
	3. 첨단 기술 및 혁신의 확대	SDGs 5,7, 8,9,13, 17 NUA 66 문단	국제전기통신연합, 유엔혁신네트워크
기후변화 대응강화 및 도시환경 개선	1.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기 질 개선	SDGs 3, 11, 13 NUA 67, 75문단	UNEP
	2. 자원의 효율성 향상 및 생태자원 보호	SDGs 6,7,8,11,12,13,14,15 NUA 68,69,70,71, 72,73 문단	UNEP, FAO
	3.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및 인프라의 효과적인 적응	SDGs 9,11, 13 NUA 77,78, 79 문단	UN 재해위험감소사무소, 기후변화에 대한 UN 기본협약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1. 사회적 통합 향상 및 포용적인 공동체	SDGs 9,10,11, 16 NUA 33, 40, 77, 78 문단	UNHCR, 평화유지사업부, 정치평화국, IOM, UNDP, UNICEF, 인도주의 조정국, 인권고등판무관실
	2. 이민자, 난민 등의 생활수준 향상 및 포용	SDGs 1,5,8,10, 11 NUA 29,30, 35 문단	UNHCR, IOM, 인도주의조정국, UNDP, UNICEF
	3. 건조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향상	SDGs 9,11,13,16 NUA 77, 78 문단	UNDP, 유엔재해위험감소사무소, 세계은행

자료: UN-Habitat(2019: 10-3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추진전략으로 4개의 변화의 영역(domains of change)을 제안하고 있으며, 각 변화의 영역에 따른 기대, SDGs 및 NUA 이행여부, 주요 협력기구 등을 제시

- 4개의 변화의 영역은 ①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빈곤 및 공간 불평등 감소, ② 도시 및 지역의 공동번영 강화, ③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도시환경 개선,

④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등으로 구성

- 각 변화의 영역은 세부결과를 3개씩 제안하고 있으며, 거주환경, 이동성, 지방재정, 환경 보호, 포용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표 3-1 참고).
- 이외에도 4개의 변화의 영역 주제별로 유엔 해비타트의 역할을 규정하고, 목표별로 향후 유엔 해비타트가 수행할 업무를 명시함

그림 3-1 | 「전략 계획 2020-2025」 주요 내용 및 구조



자료: UN-Habitat(2019: 32)

- 각 4개의 변화의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interlinked)되며, 상호보완적이며, 통합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포용 측면과 공통주제영역을 설정함
 - (사회적 포용 측면) 변화의 영역은 인권, 성별, 어린이, 청소년 등의 사회적 포용관점에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대한 오랜 차별과 사회적 소외도 바로 잡아야 함을 강조, 모든 변화의 영역에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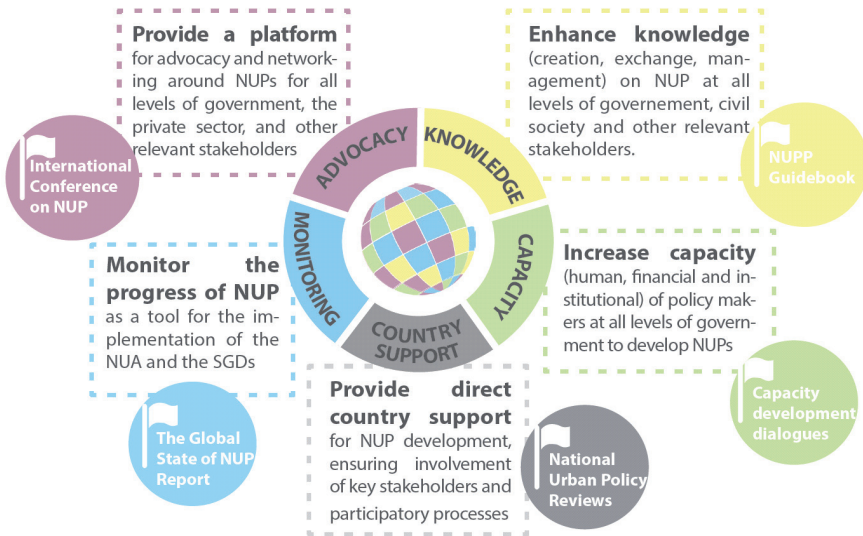
- (공통주제영역) 회복력 및 안전을 공통주제영역으로 설정하여 자연재해 및 분쟁의 결과로 인한 도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시 관련성을 인식함

3)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NUPP) 추진

□ UN Habitat는 OECD, Cities Alliance와 함께 「의제」 이행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 NUPP) 도입

- 「제2차 국가도시정책에 대한 국제회의」(2017. 5, 프랑스 파리)를 통하여 이 프로그램을 공식화
- 국가 및 기관별로 국가도시정책프로그램의 파트너를 확보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은 지식교류,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 중

그림 3-2 | NUPP 활동의 핵심내용



자료: UN Habitat, OECD, Cities Alliance. 2017. The 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 : Implementing the New Urban Agenda.

□ 국가도시정책(NUP)을 「의제」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보고 개도국의 국가도시 정책 수립, 지식공유, 역량강화 등을 위한 글로벌 지원체제 구축

- NUPP 활동은 플랫폼 구축, 지식강화, 역량개발, NUP 진행상황 모니터링, 개별국가 지원 등의 내용으로 추진 중
- 주요사업으로 NUP에 대한 국제세미나 개최, NUP 수립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별 NUP 계획 수립 지원, 역량강화, 지식교류 등의 사업추진 예정
- NUP formulation guide (2018) 및 Global State of National Urban Policy (2018) 등 국가도시정책에 대한 서적 발간

2. 세계은행

1) 배경 및 동향

□ 세계은행은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최근 빈곤 퇴치와 더불어 보건, 교육, 환경 등 사회개발 분야 지원 확대

- 세계은행 그룹은 유엔 국제연합 (UN)과 협약을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

□ 세계은행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관의 핵심 목표와 연계하고 유엔과 파트너십을 강화를 통해 이의 이행을 지원

- 세계은행은 기관의 핵심 목표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서로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
 - 세계은행의 두 가지 핵심목표는 빈곤종식과 공동번영의 추구(8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90 이하 소득의 절대빈곤 하에 있으며 2030년까지 퇴치 마감시한 설정)
 - 지속가능발전목표 1번 목표 역시 빈곤종식임

□ 세계은행과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UN-WBG Strategic Partnership Framework) 구축

- 세계은행과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약속하고 네 영역의 핵심 협력 분야 설정(2018, 5. 18)
- (1)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이에 따르는 재정을 지원 (2)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 (3) 인도적 지원과 발전의 연계, 그리고 이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4) 데이터 혁신의 실현

□ 세계은행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점검을 위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매년 기관의 역할을 재확인

- 세계은행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기관의 역할을 (1) 재정지원, (2) 자료의 구축, (3) 이행지원에서 찾고 있음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nd the World Bank Group」를 매년 발간하여 17개 목표 별로 이행상황과 과제를 점검

2) 세계은행의 국토·도시부문 전략

□ 세계은행은 대표적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Twin Goals(절대 빈곤 종식, 번영의 증진)에 따라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고, 생산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화를 지원

- 탄력적인 도시 계획을 통해 세계은행 그룹은 도시가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다 다양한 변화 조건에 적응하고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지원
- 도시 개발에 관한 세계은행의 사업은 COP21과 COP22 기간 동안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
- 세계은행은 또한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 된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채택 된 New Urban Agenda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

- 직접 자금 조달, 다른 자원의 활용 촉진, 국내 자원 동원을 통한 유엔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

□ 세계은행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개발, 재해위험 관리, 국토 및 농촌개발 분야별 목표 수립

- 도시개발 분야: SDG 11과 새로운 도시의제에 맞추어 도시계획, 서비스, 제도 관련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및 추진
- 재해위험 관리 분야: 모든 차원의 개발에서 회복력 고려

표 3-2 | 세계은행 재해위험 관리 분야 전략

목표	전략	운영계획
모든 차원의 개발에서 회복력 고려	1. 적응금융 촉진 2. 주류화된 전체 정부 프로그램 접근방식 추진 3. 적응과 회복력에 대한 전지구적 진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고 추적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등급 시스템 개발	• 재해위험 관리 과학 혁신 / • 회복탄력적인 인프라 추진 • 도시의 회복력 증진 • 수력발전 서비스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 금융 보호 강화 / • 사회적 회복력 구축 •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 기존 및 새롭게 부상하는 리스크를 충족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 보장 • 회복탄력적인 복구 지원

자료: 세계은행 재해위험 관리 전략,
<https://www.worldbank.org/en/topic/disasterriskmanagement/overview#2> (최종접속일: 2019.11.1.)

- 국토 및 농촌개발 분야: 국가가 모든 사람의 공평한 토지 및 재산권을 인정하도록 지원하고,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 활용 촉진
 -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한 재산권 확보와 전 세계 공동체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 추진
 - 민간 부문, 지방 정부, 시민 사회 등이 토지 및 지형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지역 수익 창출, 위치 기반 분석 및 의사 결정, 도시 관리, 기후 변화를 개선 할 수 있도록 국가를 지원
 - 2030년까지 토지와 재산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들의 약속을 강화하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Land 2030 Global Initiative"를 준비하고 파트너와 협력 중

□ SDG 11과 「새로운 도시의제」 달성을 위하여 세계은행은 도시개발 분야 3가지 전략 우선순위와 6가지 사업 분야 선정⁵⁾

- 3개 전략 : 「새로운 도시의제」 재정지원, 개발발도상국 국토개발 촉진, 기후 변화 및 재해위험에 대한 도시 회복력 증진
- 6개 사업분야 : 도시경제 성장, 도시빈곤과 포용,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 저렴한 주택 및 토지, 도시관리/금융 및 거버넌스, 도시환경

표 3-3 | 세계은행 도시부문 전략과 세부내용

전략	내용	세부내용
「새로운 도시의제」 재정지원	• 민간 및 상업 금융을 비롯한 여러 출처에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 강화 지원	• City Credit worthiness Initiative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실적을 강화하고, 국가보증이 없는 국내/지역 자본시장 진출 지원
개발발도상국 국토개발 촉진	• 도시에서 시민과 기업을 서로 더 연계하여 생산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집약 경제를 활용	• 동아시아 및 태평양 도시에 대하여 경제, 공간, 사회적 측면을 통합하면서 계획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법을 통해 포괄적이고 공정한 도시 성장을 보장하도록 장려 • 아프리카의 도시에 대하여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토지 시장을 개혁함으로써 아프리카 도시의 사람들과 기업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 가속화, 일자리 추가, 도시 경쟁력 향상 추진
기후변화 및 재해위험에 대한 도시 회복력 증진	• 적절한 인프라 부족 문제, 토지이용 계획 및 건축 법규로 인한 도시 거주자 위험 증가에 대응	• Cities Resilience Program (CRP, 도시회복력 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및 재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 마련 추진 • 세계은행의 Global Platform for Sustainable Cities (GPSC)는 11개국의 28개 도시와 제휴하여 Global Environment Facility(GEF)로부터 1억5100만 달러를 지원 받음

자료: <https://www.worldbank.org/en/topic/sustainable-communities#2>, (최종접속일: 2019.11.1.)

5) <https://www.worldbank.org/en/topic/sustainable-communities#2> 최종접속일: 2019.11.1.)

3. 아시아개발은행(ADB)

1) 배경 및 동향

□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 1963년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전신) 각료회의에서 제안되고, 1965년 12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설립 협정에 조인, 1966년 12월 활동을 개시함(국제개발협력 용어집 <https://m.blog.naver.com/leechland/220666277212> 최종접속일: 2019. 11. 1)

- 회원국에 대한 대출, 기술원조, 실태 조사,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를 주요 활동으로 함

□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대응을 기관의 핵심 과제로 설정

- 아시아 지역 도시인구 비율은 1950년대의 약 20%에서 2018년에는 약 48%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급속히 증가 예상(ADB, 2018: 8)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들은 점점 커지고 관리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도시 기반시설 부족, 기초서비스 부재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 아시아개발은행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기관의 전략계획은 「전략 2030」 작성(2018년)

- 「전략 2030(Achieving a Prosperous, Inclusive, Resilient, and Sustainable Asia and the Pacific)」은 기관 전체 사업방향 전환을 위한 전략
-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일련의 유엔합의들을 반영하고 지역의 장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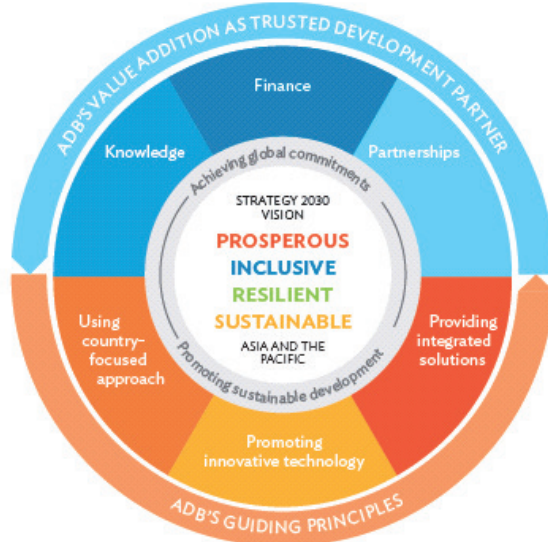
2) 「전략 2030」의 주요 내용⁶⁾

□ (비전) 풍요롭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태평양

□ 추진전략

- 빈곤 및 불평등 감소 / • 양성 평등 제고
- 기후변화 대응, 재난 회복성, 환경지속가능성 제고
-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Making cities more livable)
- 농촌개발 및 식량안정성
- 거버넌스 및 제도역량 강화 / • 지역협력 및 통합 촉진

그림 3- 3 | ADB 비전 및 전략



자료: ADB(2018: 10)

6) ADB(2018:10) 참고하여 작성

그림 3-4 | ADB 2030 이행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



자료: ADB(2018: 14)

3) 아시아개발은행의 국토·도시부문 전략

□ 「전략 2030」은 7개의 핵심분야 중 하나라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안

- 아시아개발은행은 전통적으로 인프라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국토·도시분야는 핵심적인 사업영역에 해당함

□ 「전략 2030」은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영역에 네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함

- 통합적 해결책의 제공 : 아시아개발은행은 건강, 이동성, 성적 평등, 환경성을 제고하고 있는 통합적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재정지원 :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기존의 재원(재산세, 사용료 등) 및 새로운 재원(채권, ppp 등)의 발굴 지원
- 포용적, 참여적 도시계획 : 지역 수요에 기반한 통합적인 도시계획과 투자 지원. 도시의 모든 주체의 참여와 그들의 소요를 고려

-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제고 및 재난관리 강화 : 도시계획 과정에 기후변화와 재난관리의 통합적 고려 강화. 또한 재난 예측 대응성 강화 및 역량 강화

□ 「전략 2030 운영계획(STRATEGY 2030 Operational Plan)」은 국토·도시부문의 세부전략 제시

- 도시부문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1) 도시지역 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제고, (2) 도시계획 및 재정건전성 강화, (3) 도시환경, 기후변화 회복력, 재난 관리 역량 강화 제시

표 3-4 | ADB의 Strategy 2030 도시부문(Making cities more livable) 운영계획

전략적 우선순위	세부 운영계획
1. 도시지역 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제고	• 도시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 설립 • 통합적 도시 개발 촉진. • 정책 개혁, 역량 개발, 제도 강화 및 지식 관리 결합 • 파일럿을 개발하고 최신 기술로 도약 • 스마트 도시 계획을 준비하고 이행 • 도시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현지화 및 구현 지원 • 도시 지역의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 입증된 디지털 기술 사용 확대 • 물 보안 및 적절한 폐기물 관리 보장 • 에너지 보안 제공 / • 대중교통 이용 증진 • 사회 복지 서비스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통해 빈곤층 및 포용적 도시 조성 지원
2. 도시계획 및 재정건전성 강화	• 통합적 도시 계획 준비 / •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계획 지원 • 다양한 도시 카테고리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 방식 사용 • 도시가 내부 재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토지 기반 금융 지원 / • 혁신적인 외부 자금 조달원 개발 •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해 유틸리티 및 서비스 제공업체 지원 • 유틸리티의 도시 거버넌스 개선 지원
3. 도시환경, 기후변화 회복력, 재난관리 역량 강화	• 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원 / • ADB 운영에서 에너지 효율 증진 • 위험관리를 고려한 토지이용 관리 지원 • 순환 경제 관행 장려 / • 자연 기반 솔루션 채택 • 탄력적인 도시 조성 지원 / • 재난 대비 및 비상 대응 계획 강화 • 국가가 결정한 기부금을 현지화 할 수 있도록 도시 지원 • 도시 인프라 회복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

자료: <https://www.adb.org/about/strategy-2030-operational-priorities> (최종접속일: 2019.11.1.)

4.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1) 배경 및 동향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 및 지역 내 국가 간 또는 지역 외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 및 유지 강화를 위해 1947년 설립

- 국제연합(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업화 지원, 국제무역 촉진, 경제·사회 조사 분석 및 개발정책연구, 환경과 지속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 UNESCAP은 53개 회원국을 보유한 가장 큰 정부 간 플랫폼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발전을 위한 분석을 통해 역내 싱크탱크로 기능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UNESCAP은 SDGs 이행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어, 지역 개발 및 통합을 통해 공유된 취약성, 연결성, 금융협력 등을 강화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지역 내 주민들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의 제도적 역량강화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유엔기관 및 정부기관과 협력
- 8개의 핵심분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직운영 : ① 발전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및 재정, ② 무역, 투자, 혁신, ③ 교통, ④ 통계, ⑤ 사회발전, ⑥ 환경과 발전, ⑦ ICT와 재해위험경감, ⑧ 에너지
- 도시부문(urban development)은 ‘환경과 발전’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2) UNESCAP의 SDGs 대응

□ SDGs 대응을 위한 UNESCAP 결의안 채택(E/ESCAP/RES/72/6)과 이행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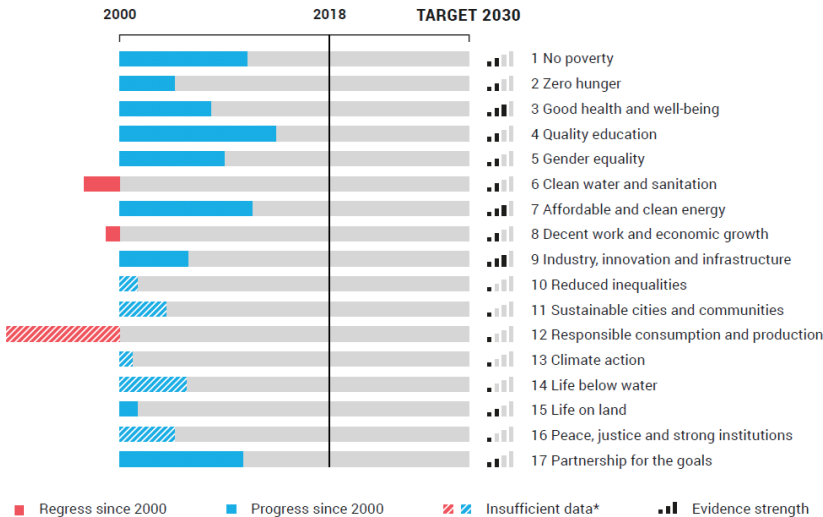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30 의제」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여”를 채택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지원을 약속

- 지속가능발전의 세 영역의 균형있는 통합을 촉진하고 회원국에게 매년 최신정보와 제안사항을 제공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 제공
-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이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
- 기 보유한 전문성과 정부 간 포럼 등을 활용하여 회원국에게 역량강화 지원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내 대화와 진행과정을 주도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APFSD) 개최 (현재 6회 개최됨)
 - 하위 지역별 APFSD 준비모임 개최 / - SDG Week 행사 개최 (2016/17년)
-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를 발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s 이행상황을 계량화된 지표로 제시, 하위지역별로 성과와 과제 제안

그림 3- 5 | UNESCAP의 역내 SDGs 이행 평가



자료: UNESCAP(2019a: 3)

3) UNESCAP의 국토·도시부문 전략

□ UN Habitat 등과 공동으로 Asia Pacific Urban Forum(APUF)을 개최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속가능 도시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노력 고취

- 제7회 APUF는 2019년 10월 15-17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2만여 명 참석
- 아시아·태평양 도시의 미래(Future of Asia and Pacific Cities: Transformative Pathways to Achieve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제로 SDGs의 이행전략에 대해 논의

□ APUF7의 결과물이자 도시부문 SDGs 이행수단으로 ‘지속가능도시화를 위한 페낭 플랫폼(Penang Platform for Sustainable Urbanization, PPSU)’ 구축

- PPSU는 효과적인 SDGs 및 NUA 이행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1단계 (2019-2023) 목표로 ‘CITI’를 제안(APUF 7 홈페이지, <https://www.apuf7.org/initiatives/ppsu>, 최종접속일: 2019. 11. 20)
- CITI는 협력(Collaborate), 통합(Integrate), 변혁(Transform), 증가(Increase)를 의미함

표 3-5 | 「페낭 지속가능한 도시화 플랫폼(PSSU)」 주요 목표

구분	주요 내용
협력(Collaborate)	•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도시솔루션 구현을 가속화
통합(Integrate)	• 지역 내 도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혁신적인 도구, 모델, 연구 및 모범사례 활용
변혁(Transform)	• 지역 수준의 솔루션 강화를 위한 촉매자금 활용을 위한 기존자원への 접근 및 새로운 파트너십 강화
증가(Increase)	• 정책 및 예산 활성화를 통해 지역차원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추진을 위한 정치적 의지 강화

자료: <https://www.apuf7.org/initiatives/ppsu> 참고하여 저자 작성 (최종접속일: 2019.11.20.)

- PSSU (2019-23) 주요목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개의 분야에서 “coalition of willing”(의지연합)을 이행할 예정

표 3-6 | 폐낭 지속가능한 도시화 플랫폼 역점 분야

구 분	주요 내용
선정된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구체화 및 실행(프로그램)	• 플랫폼 회원국들은 선정된 도시들과 함께 협력하여 맞춤형 도시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조화, 단순화 및 조정 등을 수행 • 이를 통해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
혁신적인 지역금융 매커니즘을 통한 촉매자금에의 접근(금융)	• 도시와 지역사회를 공공 및 민간자금과 연결하여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증진 • 벤처 자선 네트워크, 혼합 금융 등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 매커니즘과 수단을 활용
아시아·태평양 도시 모델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 제공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	•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우선순위 모델, 사례 등을 조정 • 기술 및 역량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 글로벌 사례 및 모델을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솔루션 관련 교류와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연구 장려 (연구 및 홍보)	• 도시와 협력하여 자료(증거)와 실체가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순위 분야를 파악하고 파일럿 스터디, 연구, 교류 등을 통해 차이를 공유

자료: <https://www.apuf7.org/initiatives/ppsu>(최종접속일: 2019.11.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5. 종합 및 시사점

□ 국토·도시는 SDGs 및 국제기구 전략에 있어 단순히 하나의 부문이 아닌 지향해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

- '지속가능 도시화'는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도시법·도시재원 등의 제도적, 재정적 수단 확보 논의 중
- 국내에서도 SDGs 수용에 있어 국토·도시분야를 하나의 부문으로 보기 보다는 지향해야할 가치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노력 필요

-
- 이 분야에 재원투입에 있어서도 수원국의 지속가능 도시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지향적 접근 필요

□ 도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 기구들은 국토·도시분야의 전략을 별도로 세우고 있음

- 많은 기관들이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국토·도시분야의 계획/전략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은 도시가 7개 중점분야 중 하나로 설정되어 세부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세계은행은 17개 SDGs 목표별 전략을 UNESCAP은 8개 핵심분야의 하나인 ‘환경과 발전’의 하위분야로 설정
- 최근 도시관련 UN 협약(센다이 프레임워크, 2030의제, 새로운 도시의제 등)의 증가로 개발협력에 있어 도시분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주요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관의 핵심목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실천수단을 마련

- 유엔 해비타트는 「전략계획 2020-2015」, 아시아개발은행은 「전략 2030」을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조직의 목표로 수용, 세계은행은 SDGs 별 세부 목표를 구체화하여 실천전략 마련
- 각 기관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수단(플랫폼, 이니셔티브)을 마련하고 회원국 정부 및 관계기관의 참여 추진
 - 유엔 해비타트의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 세계은행의 City Credit worthiness와 Initiative Cities Resilience Program, UNESCAP의 폐낭 지속가능도시화 플랫폼 등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기관의 사업목표이자 동시에 사업성과의 측정기준이 되고 있음
 - 사업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기준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도입하고 이의 진행상황을 점검(UNESCAP 등)

□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에 있어서 제도 구축, 역량강화 활동의 중요성 증대

- 유엔 해비타트의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계획수립과 관련된 제도 구축,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제도와 역량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핵심적이라는 인식을 보여줌
- UNESCAP의 「폐낭 지속가능 도시화 플랫폼」 역시 도시관리의 제도와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의 증진을 위한 정보교류, 우수사례 공유, 자원개발, 협력을 추진
-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전통적으로 인프라 개발의 비중이 크지만, 이에 있어서도 공간적 통합적, 도시계획 등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

□ 국토·도시부문은 간부문적(inter-sectoral)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참여적, 통합적, 혁신적 프로그램 발굴 추진

- 국토·도시부문은 타부문과 밀접히 연계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 간부문적인 성격이 강함
- 프로젝트 발굴에 있어서도 여러 부문에 걸치는 프로젝트를 우선하며, 통합적, 참여적, 다주체 협력적 접근을 강조함
- 새로운 재원의 발굴, 민간의 창의성 활용, 신기술의 적용 등의 혁신성 강조

4

CHAPTER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흐름 | 57
2.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구조 | 64
3. 주요 프로그램별 특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 | 68
4. 종합 및 시사점 | 81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흐름

1) OECD DAC 가입 이전(-2009)

□ 1960-70년대 한국은 원조 수원국으로서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한편 외교안보차원에서 소규모 원조사업을 추진

- 주로 선진 공여국 혹은 국제기구의 자금을 지원받아 연수생 초청사업, 전문가 파견 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경제성장과 함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점차 정부자금을 활용한 원조사업 확대(한국국제협력단, 2008:407)

- 1963년 미국 USAID의 지원으로 개발도상국 연수생 초청 사업 운영시작, 1965년부터 자체 재원을 활용해 초청사업 수행

- 1967년 전문가 파견사업을 시작하며 프로그램 다양화

- 북한과의 외교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북한이 외교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해 원조사업 전개

□ 1980년대 들어 원조사업의 채널과 형태가 보다 다양화되기 시작

-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개발도상국 주요 인사를 초청해 우리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2008:407)

- 1984년 건설부에서 무상건설기술 용역사업, 노동부에서 직업훈련원 건립 및 운용 프로그램 시작
- 1987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지원을 위해 3,000억 원을 출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설립
- 1990년대 들어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설립, 개도국에 대한 본격적인 원조제공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세계화와 보편윤리, 인도주의적 원조 등이 강조되기 시작
- KOICA의 설립으로 그동안 건설부, 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서 분절되어 실시해오던 기술원조, 인적교류사업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조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됨
- 문민정부 시기(1993-1997) ODA가 세계화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참여적 개발 등 다양한 원조담론이 도입됨
- 국민의 정부시기(1998-2002)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보편윤리와 인도주의적 원조가 강조되었으며,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강조되면서 원조를 민주주의 및 인권보호와 연계하기 시작함

2) OECD DAC 가입에서 SDGs 체제 이전(2010-2015)

- 2010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ODA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국제원조 규범을 도입
- 2010년에는 OECD국제개발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해 효과적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컨센서스 형성에 기여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및 국제사회의 원조 규모 확대 및 원조효과성 제고 논의에 동참하여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 OECD DAC 동료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DAC 회원국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사업 수행을 위한 노력 경주
- 2010년 1월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총괄조정기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 ODA의 체계화를 위해 국가전략으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 마련⁷⁾

- “우리의 발전모델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높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를 위한 “압축적인 개발전략” 필요성 제기(관계부처 합동, 2010a)
- (정책방향) ODA 국가종합전략으로 원조 규모와 비율,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방안 등 제시
 - (원조규모와 비율) ODA 규모를 '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하고 유·무상 원조 비율을 '15년까지 40:60 내외로 유지
 - (통합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유·무상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ODA 정책 및 사업 조정
- (3대 전략)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이라는 기본가치 하에 3대 선진화 전략 제시
 - (개발콘텐츠) 우리의 개발경험, 사업기술, 감성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조모델 마련
 - (원조체제 개편) 유·무상 별도 추진되었던 기존 원조체제를 통합추진체제*로 개편하여 분절화 해소 및 원조효과성 제고

7) 이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10a) 을 토대로 정리

- (국제활동 강화) 최근 달라진 국가위상에 맞게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원조 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인도적 지원 강화
- (기반확대) 범정부 통합홍보체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ODA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 국제개발협력 기반 확대 병행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을 통해 26개국의 중점협력국 선정, 국별지원 전략 수립
 - 우리나라의 원조전략과 협력대상국의 개발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 중점협력분야 및 실행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
 - 아시아: 최우선 중점지원기조 유지 / - 아프리카: 빈곤감축과 자립기반 확대에 중점 / - 중남미: 우리발전모델에 대한 관심 증가 대응 / - 중동·CIS: 분쟁지역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 / - 오세아니아 등: 원조 소외국을 통한 성공모델 구축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 수립⁸⁾

- (기본방향) MDGs 달성 및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의 역할에 주목해 개도국의 근본적 역량제고 및 민간부문 활동촉진에 기여하고 협력대상국과의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구축을 목표로 함
 -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도로·항만·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
 - 개도국의 성장에 필요한 개발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에 주력
 - 개발도상국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확대하고, 여타 대외정책수단(통상·투자·조세·금융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
- 지역별로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되, 아프리카·중남미 등에 대한 경험수요

8) 이하 내용은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을 토대로 정리

확대 등을 고려해 지원지역을 다변화하고, 분야별로는 개도국 개발전략 상 우선순위가 높고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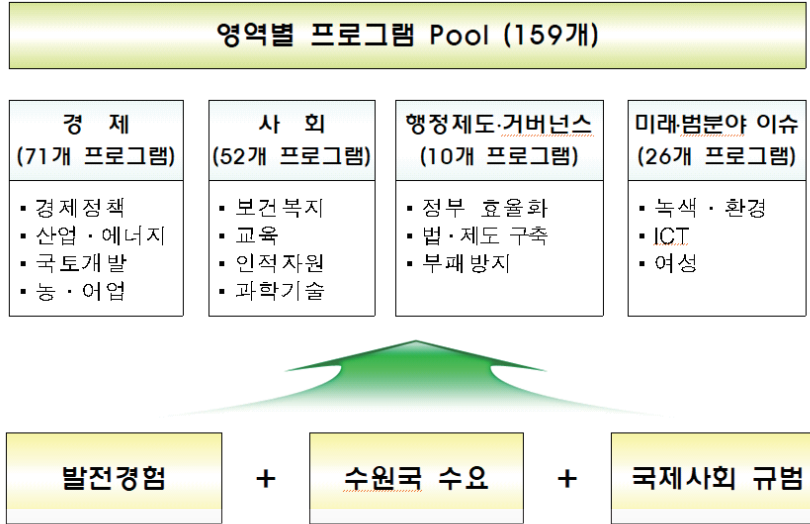
-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유·무상 통합지원전략 수립, 사업발굴 및 선정절차 개선, 유·무상 원조 간 연계 확대, 비구속성 원조비율 제고 등 원조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편
- (전략목표) 1) MDGS 달성에의 기여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2) 자립 성장을 통한 공정한 지구촌 형성, 3) 분쟁·재해 관련 인도적 지원 및 평화구축 노력지원 강화를 통해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 4) 환경·여성·인권·민주주의 등 범분야적 보편적 가치 지향, 5) 선진 원조규범 추구 및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ODA 선진화 실현, 6)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통한 국격 및 소프트파워 제고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0)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2012) 수립⁹⁾

- (배경) 우리나라 발전경험 분석을 통해 ODA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추진방식까지 추출·정리하여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 (개념)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토대로, 수원국의 수요와 여건을 중심으로 빈곤퇴치·자립역량 확보와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
- (한국 발전경험의 특징) 강력한 발전의지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 역량 결집과 사회발전에 따른 민간역할 증대를 특징으로 함
- (사업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형 ODA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프로그램 수준으로 정리, 총 4개 영역에 대해 159개 ODA 프로그램 풀 구성

9) 이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12)을 토대로 정리

그림 4-1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의 영역별 프로그램 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2: 18)

3) SDGs 체제 성립 이후(2016-)

□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채택, 국내재정상황 악화로 인한 ODA 재원확보 제약 등 대내·외적인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

-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 ODA 정책도 SDGs 달성을 위한 방향제시가 필요해짐
- 개도국 내 대규모 사업증가 및 기후변화·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재원 수요 증가
- 부족한 개발재원확보를 위해 ODA의 전략적 활용,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6-2020년) 수립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DGs 이행목표 달성기여를 명시하고 있음
- 기본방향으로 1) 통합적인 ODA, 2) 내실있는 ODA, 3) 함께하는 ODA를 기본방향으로 제시
 - (통합적인 ODA) 유·무상 원조 통합전략을 강화하고 중점협력국의 재조정과 제2기 국별협력전략 수립
 - (내실있는 ODA) ODA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종료 ODA사업의 사후관리, ODA 평가와 환류를 강화 함
 - (함께하는 ODA) 범국민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는 한편 개발파트너십 및 재원 다원화를 위해 노력

표 4-1 | 제1·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주요내용 비교

제 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유·무상 통합추진기반 구축 • Bottom up 방식 사후적 조정 • ODA 규모의 지속적 증가 • ODA 평가 시스템 도입 • 시민단체·기업·학계 참여를 위한 제도마련 • 일반국민의 ODA 인식 제고	• 유·무상 간 통합전략 강화 • Top down 방식 전략적 계획 수립 • ODA 사업의 질적 제고 • ODA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강화 • 참여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세계시민으로서 ODA에 능동적 참여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0b, 2015) 제1차,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발췌 정리

□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 분야를 선도하는 중견공여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틀을 다질 계획임 (맹준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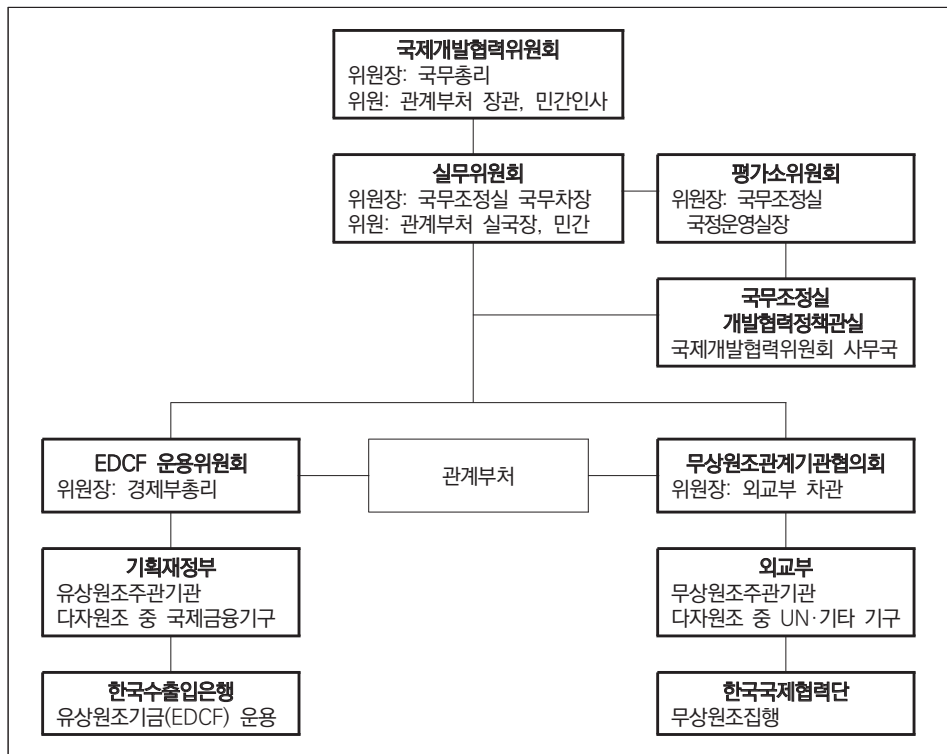
-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의 중점과제로 중점과제로는 1) 개발협력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통합추진 인프라 조성, 2) 개발협력 분절화 완화 및 현장 중심 사업추진 기반 강화, 3) 개발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방식 개선 등 제안 예정

2. 국토 ·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구조

1)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

-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는 총괄 및 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상원조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의 두 축으로 구성

그림 4-2 | 우리나라 개발협력 추진체계



자료: ODA Korea. www.odakorea.go.kr 일부를 최신 내용으로 수정(최종접속일: 2019.8.10.)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5명 내외의 관계부처 기관장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주요 정책을 총괄함.

-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연간 ODA 종합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함. 실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와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국무조정실에 설치
- 2015년 말 ODA 규모 확대 및 질적 제고, 민간협력 확대, 통합적·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

□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 유상원조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총괄

- 유상원조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사업승인 및 정책결정을 위해 관계기관협의회를 소집하며,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주관을 통해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수립에 영향력을 행사
- EDCF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위탁 집행 중

□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 무상원조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총괄하고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주관함.

- 전체 무상원조 예산의 약 80%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KOICA)이 집행
- 무상원조 예산은 KOICA 외에도 40여개의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집행함.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2017년 약 10.5만 불의 예산을 집행하여 전체 무상원조 예산의 약 0.7%를 집행

2)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 기획재정부의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 기획재정부는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총괄

-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EDCF는 1987년에 설립된 정책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 (한국수출입은행, 2017a)하기 위해 양허성 차관을 지원함.

- 국토·도시 관련 사업이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교통 38%, 수자원·위생 17% 등)

- KSP는 기획재정부의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으로 한국형 개발협력모델로 차별화를 추구¹⁰⁾

- ‘1) 수원국의 필요에 맞춰서, 2) 정책연구, 자문, 연수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을 체계적으로 추구하고, 3) 주인의식과 공동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 중심으로 운영’ (박명호, 2016)

- 총 415 건의 완료사업 중 국토개발 분야 49건(11.8%) 수행

□ 외교부의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은 국별협력사업, 글로벌연수사업, 인도적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80%를 집행¹¹⁾

-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국별협력사업이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 국토·도시 부문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의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는 SDGs 이행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자체 무상원조사업으로 인프라 ODA사업을 운영 중

10) KSP 홈페이지, ksp.go.kr(최종접속일: 2019.8.10.)

11) KOICA 공식홈페이지 www.koica.go.kr(최종접속일: 2019.8.10.)

- 인프라 ODA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인프라 개발컨설팅과 기초 시설 구축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형 인프라 지원사업이 있음
-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해 해외건설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해외 건설 시장개척사업을 운영
 - 본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해외건설협회를 지정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예. 전략계획 수립사업)은 직접 집행
 - 본 사업은 원조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EDCF 연계목적 사업, 정책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전 원조사업의 성격을 가짐
-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촉진법」을 근거로 2009년부터 해외건설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민관공동투자로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structure Fund: GIF)를 조성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GIF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19년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3조원 규모의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의 조성을 추진 중(관계부처 합동, 2019)
 - 본 기금은 원조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조사업의 후속사업 재원으로 운용가능

표 4-2 |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소관부처	집행기관	프로그램명
기획재정부	• 한국수출입은행	• 대외경제협력기금
	• 한국개발연구원(경제·사회정책)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 한국수출입은행(건설·인프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산업·무역·투자)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 국별협력사업(프로젝트형/개발컨설팅)
국토교통부	• 직접 집행	• 인프라 ODA사업
	• 해외건설협회	• 해외건설 시장개척사업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structure Fund: GIF) •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Global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 PISF)

자료: 저자작성.

3. 주요 프로그램별 특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

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¹²⁾

□ EDCF의 개요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987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기금
-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으며, 세계 54개 개발도상국의 395개 개발사업에 대해 약 15조 9,008억 원의 원조자금을 지원
-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많거나 경험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선별하여 중점지원하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집중지원

표 4-3 | EDCF의 지원대상 국가 및 지원분야

구분	내용
지원대상국가	• '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연간 약 12,055달러 이하인 국가(세계은행 분류 상위중소득국 이하)중에서 GDP, 인구 규모가 적어 경험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 또한 이들 국가들을 경험잠재력을 기준으로 중점국가와 일반국가로 분류하여 중점국가 중심으로 지원추진
지원분야	•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사회 인프라부문 • 인간의 기초적 삶의 조건(Basic Human Needs)과 관련 있는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가 주요대상 •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지원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현지 필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자료: EDCF 홈페이지(<https://www.edcfkorea.go.kr>)에서 정리(최종접속일: 2019.11.11.)

12) EDCF 공식홈페이지(www.edcfkorea.go.kr)(최종접속일: 2019.11.11), 한국수출입은행(2017b) 「EDCF 30년사」를 토대로 정리

□ EDCF의 시기별 운영기조

- EDCF의 운용기조는 시기별로 제1기(1987-1997), 제2기(1998-2009), 제3기(2010-2016), 제4기(2017-현재)로 구분(한국수출입은행(2017b))
 - 제1기는 EDCF 설립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시행기반을 마련한 시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제정하고 경제 인프라 건설사업 위주로 지원방향을 설정
 - 제2기는 대외환경에 맞춰 EDCF의 성장기반을 확충한 시기로, IMF 외환위기로 인해 5년 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됨에도 계획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각종 제도적 기반 정비

표 4-4 | 시기별 EDCF 운영방향 및 제도

시기	주요 대외적 변화	EDCF 운영방향 및 제도 변화
1987-1997 국제개발협력 시행기반 마련	• 세계경제 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 KOICA 설립 • OECD 가입	•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 수단의 하나로 EDCF 설립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 및 EDCF 재원 조성·확충 - 제도적 절차 마련 및 EDCF 사업평가제도 도입 • 전문성 강화 및 무상원조와의 연계지원체계 마련 • 종합개선방안 수립 및 지원제도 확충 • 구축성 원조 관련 OECD 규정 준수
1998-2009 EDCF 성장기반 확충	• IMF 외환위기 • MDGs 체제의 등장 •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확립	• 기금출연 일시 중단, 지원제도 정비 및 기업 수주역량 강화수단 마련 • ODA 규모 확대 및 질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능동적 사업발굴체제 도입, EDCF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중기전략 수립, 사업평가제도 개선, MDB 협조체계 구축
2010-2016 선진 지원체계 구축과 국제위상 확립	• OECD DAC 가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 개발금융의 부상 • 지속가능성의 부상	• EDCF 양적 확대 및 질적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 ODA 통합추진체계 내 유무상원조(KSP, KOICA)와 연계 강화, 국별 프로그램으로 통한 사업관리 체계 강화 • 프로그램 차관 및 민간협력을 위한 차관 도입, MDB와의 협력 활성화 • 세이프가드 도입 등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도입
2017-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도	• SDGs 체제 등장	• SDGs 기여, 개발재원, 글로벌 연대의식 강화 등에 맞춰 EDCF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b)을 토대로 저자 요약

- 제3기는 지원체계의 선진화와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해 노력한 시기로, OECD DAC 가입에 따라 관련 통계자료 작성 및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OECD 권고에 따라 EDCF 차관조건을 변경하고 비구속성 비중의 목표를 50%로 설정, EDCF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추진
- 제4기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며, SDGs 체계의 등장, 민간재원의 역할 강조,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 확산 등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운영방향을 설정

□ EDCF의 SDGs 대응

- 2017년 8월말 EDCF 30주년을 기념하며 처음으로 SDGs가 언급되며, SDGs를 EDCF 사업 추진의 중심가치로 설정 (기획재정부, 2017)
- SDGs를 EDCF 중장기 발전방향에 다음과 같이 반영(한국수출입은행, 2017b)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SDGs 가치를 반영한 사업 추진: 환경·사회가치의 주류화, 빈곤층과 취약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간부문 성장 생태계 구축 지원 ② 사업지원방식 다양화: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한 최적 금융협력, 맞춤형 금융 패키지, 지식협력 및 소프트웨어 연계 ③ 연대를 통한 개발사업 확장: 수원국 주도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총위, 그룹과의 파트너십 심화, 양·다자 개발금융기관들과 리스크 분담 및 전문성 공유,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 활용, 비전 달성을 위한 자원 확보 |
|---|

- 그러나 EDCF의 목표가 우리기업의 사업수주 및 국제조달시장 진출 기여에 맞춰져 있어, SDGs 체제 이후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기후변화 관련 사업은 2010년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으며, 젠더 관련 사업은 가시적 사업이 부재, 빈곤층과 취약층을 위한 사업을 표방한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의 사업은 기존의 주요 사업이었음
 - SDGs의 사업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전략은 일정부분 EDCF의 경영전략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ICA의 시기별 운영기조 변화¹³⁾

- 1기(1991~2000):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사업 본격 추진
 - 1991년 무상원조 총괄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해외사무소 신규 개설 확대 등 ODA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기반 마련
 - 1996년 OECD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개발경험을 살린 공적원조사업 본격적 추진
- 2기(2001~2010):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행, 국제개발협력 선진 원조기관으로서의 도약
 -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일조
 - 2000년대는 ODA 양적 확대로 KOICA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지역, 파트너, 유형이 다각화
 - 2006년 11월에 ODA 규모 확대에 따른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제시를 위해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7년~2009년)』을 수립, ① 개도국의 빈곤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 지원, ②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익증진, ③ 대 개도국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④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원조를 4대 전략 목표로 선정하고 전략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국국제협력단, 2011)
 - 2005년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협력대상국 수를 127개에서 58개로 축소
 - 2006년 한국국제협력단 중점 지원 7개 분야 선정
- 3기(2011-):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및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기능
 - 국내·외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다각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3)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koica_kr/853/subview.do)를 토대로 정리 (최종접속일: 2019.11.1)

달성에 기여

-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 협력의 ODA 추진
- 2011년 대내외 다양한 ODA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ODA)의 새로운 도약을 주도

□ KOICA의 SDGs 대응전략

- KOICA는 SDGs 이행을 조직의 핵심목표로 설정
 - KOICA는 전략방향과 경영목표, 전략과제에 있어 모두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표 4-5 | KOICA의 경영전략, 목표, 과제

전략방향	경영목표	전략과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촉진	중점협력국 SDGs 달성 기여	• SDGs 달성 전략과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 정부 개발정책 및 전략 연계 강화 • 개발협력사업 관리체계 내실화
융합과 협업의 파트너십 선도	개발파트너십 자원 2배로 확대	• 민간 개발협력 활성화 • 글로벌 파트너십 다각화 • 혁신적 파트너십 강화
상생의 개발협력 생태계 육성	역량있는 개발협력 인재 2만 명 양성	• 경쟁력 있는 개발협력 인재 양성 • 개발협력 인재 일자리 저변 확대 • 개발협력 지식 정보 개방 강화
사회적 가치중심 경영	청렴도 1등급 달성 국민평가 S등급 달성	• 책임 경영체제 확립 • 인권경영 실현 • 국민중심 열린 조직 운영

자료: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최종접속일: 2019.11.1.)

- KOICA는 SDGs 달성을 위해 혁신적인 사업수행방식을 도입하고, 기관개혁·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을 계획
 - (SDGs 주류화) KOICA 중장기 전략, 국가별 CPS, 분야별 전략을 연동하는 기관 차원의 SDGs 주류화 전략 수립

-
- (중점 기여분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모델로서의 스마트 새마을 운동, 인적자원 개발과 제도적 역량강화, 기후변화, 최빈국·분쟁 취약국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 (혁신적 사업수행방식) ODA를 레버리지로 하여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재원과 의 연대, 과학기술을 개발협력사업의 이행수단에 접목
 - (사업수행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포용성(inclusiveness), 근거에 기반을 둔 사업성과(data & evidence based result)
 - (기관개혁 및 제도개선) 사업수행 및 평가체계 내실화, 직원확충 및 역량강화, 외부 컨설턴트 육성을 통해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 KOICA 분야별 중기전략에 SDGs 이행전략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위한 사업발굴 추진
 -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가차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고, KOICA 중장기전략, SDGs 주류화 전략 및 제2기 국별협력전략(CPS)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
 -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을 통해 Post-2015 개발의제 중심의 성과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
 - 세부분야로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물/교통에너지, 과학기술혁신, 기후변화대응, 성평등 설정
 - SDGs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5개 테마별 이니셔티브(Initiatives) 출범
 - 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②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③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④ 기후친화적 개발, ⑤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포용적 성장

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KSP사업 개요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자문·연수를 수행하는 지식집약형 경제협력사업(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2015))
 - 협력국의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과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을 지원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이라는 고유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함
 - 기존의 ODA 사업과는 다르게 한국의 고유한 경제적·사회적 경험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타국의 개발협력사업과는 차이가 있음
- KSP는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KDI, 수출입은행 등 각 전문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04년부터 KSP 정책자문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모듈화사업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사업 및 시스템 컨설팅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

□ KSP의 시기별 운영방향¹⁴⁾

- 태동기(2004년~2009년)에는 협력국을 확대하고, 비전을 수립하는 등 KSP 기반구축에 기여함
 - KSP 정책자문사업은 20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두개 국가를 협력대상국으로 시작하여, 총 15개국을 대상으로 약 120개 주제에 관한 자문을 실시함('04년~'09년)
 - 사업 초기에는 지정학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국을 선발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지역으로 점차 확대

14)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2015)을 주로 참고하였음

-
- 협력대상국이 점차 확대되면서 KSP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전략적으로 제시하고자 제 1차 KSP 중기운용계획을 수립, KSP 비전, 목표, 국별 지원전략 및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등을 포괄적으로 다룸
 - 2010년~2013년 KSP 가 태동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도약한 시기로 사업이 대 폭 확대되고, 외연적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함
 - 기존의 정책자문사업 이외에도 모듈화사업과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을 신설하는 등 사업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타 개발협력사업과의 연계 강조
 - (정책자문사업) 협력대상국 수가 15개국에서 35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KSP 사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KDI에 국제개발협력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 설치
 - (모듈화 사업) KSP 사업 수행에 있어 체계화된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기획,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우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 함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수행
 - (공동컨설팅 사업) 2011년 도입,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기구 지역 전문성과 접목함으로써 협력대상국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한국 수출입은행이 총괄, 삼각협력 의 지식공유 모형으로 자리 잡음.
 - (시스템컨설팅 사업) 2013년 도입되었으며, 국가 중심의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기 존의 KSP 와는 달리, 협력대상국의 지식기반인프라(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컨설팅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이 총괄하였으나(2013 년~15년), 현재는 미 운영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큰 차이는 없으나, KSP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
 - KSP 사업이 추구하는 ‘지식공유’와 ‘한국정부 정책방향’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함. 최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19년 9월 9일)을 통해 KSP 사업이 ① 혁신적 포용의 확산, ② 경제협력의 촉진, ③ 불확실성 극복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함
 - ‘경제협력’ 측면에서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진출을 통한 해외 신 성장 동력 확보 등을 강조, 고중소득국과는 경제협
-

력을 강화하고, 저소득국가와는 후속사업을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KSP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원화(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7: 69-70)

- 특히 KSP 정책 컨설팅을 제공한 이후 EDCF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실제 개발 사업을 수행한 사례를 강조하는 등 KSP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강조.

표 4-6 | 시기별 KSP 운영방향 및 제도 변화

시기	대내외적 변화	KSP 운영방향 및 제도 변화
2004-2009 태동기	글로벌 금융위기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 위주로 협력을 시작하였으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협력대상국 확대 • 기존의 개발도상국 분만 아니라 중소득국과도 사업을 시작 • 제1차 KSP 중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KSP 사업에 대한 기반 구축
2010-2013 도약기	OECD DAC 가입	• 사업의 규모 대폭 확대, 사업유형의 다양화(모동화사업, 국제기구와의 컨설팅 사업 등 추가) • 관계부처와의 협업 강화를 통한 KSP 체계화
2013-현재 내실화	SDGs 체제 도입	•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지식의 중요성 강조 • KSP 사업을 통한 경제협력 및 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등 강조 • EDCF 등 타 개발협력사업으로의 연계 등을 강조

자료: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2015),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2017) 토대로
저자 요약 및 작성

□ KSP의 SDGs 대응

- 기획재정부는 SDGs 도입에 따른 KSP 사업 운영에 관한 정책 대응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KSP 사업이 SDGs 17번째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서 강조하는 지식공유, 역량개발, 파트너십과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7:22-23)
 - KSP 사업이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개발협력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 확보가 가능한 개발협력 수단으로 인지하고 있음 (정혁, 2015: 165).

4) 국토교통부 ODA

□ 국토교통부의 개발협력 정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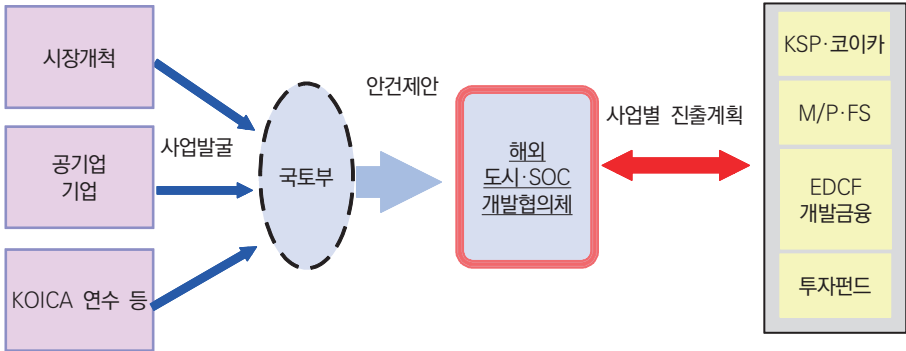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개발협력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건설진흥정책을 주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개발협력과 연계되어 있음
 - 국토부는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책, 시책,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
 - 해외건설촉진법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을 국토교통부의 지원사항으로 명시하여 개발협력을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근거 마련(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 4)
- 국토부의 개발협력은 해외시장 진출 시 리스크가 높은 신시장 개척과 공공·민간의 선단형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
 - 사업 발굴을 위해 KSP, KOICA, EDCF 등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
- 국토부는 2013년 이후 해외건설진흥정책과 연계하여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전략의 일환으로 무상원조사업은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 시작
 - 개도국에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고, 후속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국토교통부, 2014)
 - 2017년 사업내용을 컨설팅, 시범사업, 기자재 지원, 기술전수 및 역량강화 등으로 확대하여, 명칭을 「인프라 ODA사업」으로 변경(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92호)
- 국토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인식과 전략은 매우 부족
 - 국토부 인프라 ODA 사업에 일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이 언급되어 있으며, 기존사업 목표와 구조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인 것으로 보임
 - 이는 국토부의 개발협력관련 정책이 국내의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진흥 정책과 개발협력

- 국토부는 2005년부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제1차 계획에서 해외건설 지원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EDCF·KOICA 등 공적금융의 확대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건설교통부, 2005)
 - 제2차 계획에서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ODA 자금활용 사업의 발굴 지원, 해외건설 지원외교를 위한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확대 등을 명시(국토해양부, 2010)
 - 제 3차 계획에서 진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MDB와의 다자협력 및 주력국가와의 양자협력 강화를 명시(국토교통부, 2015)
- 개발협력은 해외건설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08년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ODA 지원을 신흥시장 개척과 연계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규모 확대 추진을 명시, 2009년 해외투자개발 사업타당성 조사(F/S) 지원 사업을 시작
 - 타당성 조사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GIF, 국내 금융기관 및 MDB 투자 추천 및 건설수주 외교활동 지원(국토교통부, 2015)
 - EDCF 개발금융 및 KSP, 코이카 등 무상원조사업을 해외건설진흥사업과 연계하는 전략 추진
-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미래 유망 수출상품으로 적극 육성하는 것을 해외건설정책의 우선과제로 설정
 - 2016년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국토교통부, 2016b), 2019년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2019) 마련
 - 도시건설·ICT 솔루션·법제도 등이 패키지형으로 결합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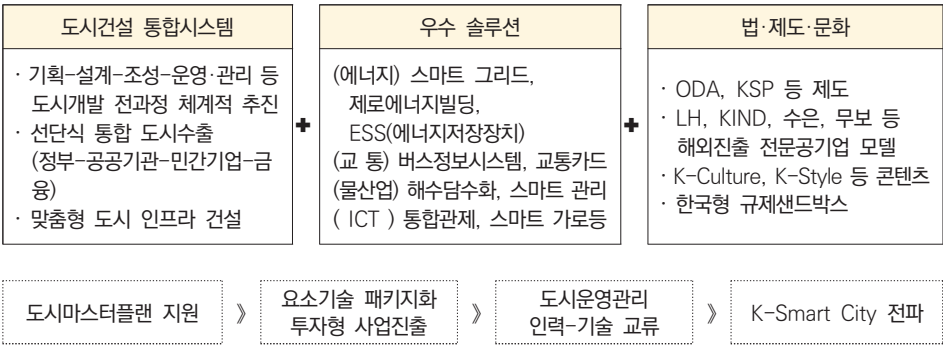
-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은 상기한 해외건설정책의 특징, 즉 공공과 민간의 선단형 해외진출전략을 대표적으로 보여줌(국토교통부, 2016b)

그림 4-3 | 선단형 해외진출을 위한 개발협력 구조(안)



자료: 국토교통부(2016b: 6)

그림 4-4 |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안)



자료: 국토교통부(2019: 5)

□ 국토교통부의 「인프라 ODA 사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

- 국토교통부의 인프라 ODA 사업은 정부의 해외건설촉진정책을 구현하는 수단
 - 2013년 해외건설 추진계획에서 개발협력 등을 통한 수주저변 확대, 패키지형 인프라

라 수출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전략의 일환으로 무상원조사업인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을 시작(국토교통부, 2014)

-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개도국에 수립해 주고, 후속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2015년부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ODA 절차를 준용하였으나, 대상 국가로 후속사업 등으로 업계 진출이 유망한 국가, 지원분야로 우리기업이 비교우위를 점하며 후속사업 발굴이 유리한 분야를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유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및 투자방안 검토, EDCF 등 개발금융과 연계, 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주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국토교통부, 2016a)
- 2013년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과 2018년 인프라 ODA 사업 간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는 SDGs 체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응으로 볼 수 있음
 - 추진배경이 우리기업의 후속사업 참여 확대 추진에서 SDGs 달성에 대한 기여 및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 지원으로 변화
 - 지원분야가 우리기업이 비교우위를 점하는 분야에서 SDGs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분야로 변화
 - 국토교통부의 인프라 ODA 사업의 목적은 SDGs 이행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표방하나, 사업의 실제 운영은 동일
 - 사업 선정은 일자리 정책, 정부 대외정책 등 범국가적 전략과 정합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함을 명시
 - 대상국가도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 정상외교 후속과제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
 - 지원분야도 후속사업 발굴과 신산업발전을 위해 스마트시티, ITS 등을 우선 고려

표 4-7 | 국토교통부 인프라 ODA 사업 내용 비교(2014년 vs. 2018년)

구분	2014년	2018년
명칭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	인프라 ODA 사업
추진배경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개도국에 수립해 주고, 후속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인프라 분야 국제개발협력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력을 지원 ※ 일자리 정책, 핵심 대외정책 등 범국가적 전략과 정합성이 높고 내실있는 사업 발굴을 명시
대상국가	ODA 중점협력국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후속 수익사업 등으로 업계 진출이 유망한 국가는 대상국가로 선정 가능	24개 중점협력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정상외교 후속과제, 우리기업 진출가능성 등 협력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중점국가도 선정 가능
지원분야	교통, 도시, 수자원 등 우리기업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후속 수익사업 발굴이 유리하고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경우는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도시, 건설기술, 교통 등 인프라 분야 ※ 후속 협력·진출과 국토교통 新산업 발전 견인을 위해 스마트시티, ITS 등 스마트 인프라·첨단교통 분야 우선 고려

자료: 국토교통부(2014)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92호

4. 종합 및 시사점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기조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0),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2012)을 통해 그 기본 골격이 마련됨

- 우리 ODA 전략의 큰 특징은 ① ODA를 민간부문 경제협력과 연계, ② 경제발전 전에 근간이 되는 인프라 개발에 집중, ③ 지원대상을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 ④ 한국 발전경험의 고유성 활용 등을 들 수 있음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SDGs 이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이상의 정책기조가 변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특징은 국토·도시분야 프로그램의 정책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는 국토·도시분야가 기존의 해외건설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짐

- 국토·도시부문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명시적으로 민간 경제협력과의 연계, 인프라 개발, 아시아 국가 대상을 강조하고 있음(한국 발전경험의 고유성에 대한 강조는 KSP를 제외하면 뚜렷하지 않음)
- 국토·도시분야는 ODA 사업 이전부터 해외건설이 활발한 영역이기 때문에 ODA를 해외건설과 연계된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ODA 전략에도 반영되어 있음

□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집행기관은 공적개발원조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경향이 강함

-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인 EDCF는 우리나라와의 경험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지원”(EDCF 홈페이지)
- 국토부는 ODA를 해외건설사업 진흥을 위한 공공지원으로 이해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부처의 ODA에 대한 인식을 특징적으로 보여줌
- KOICA는 상대적으로 경제협력에 대한 언급의 비중이 낮지만 실제 추진사업에 있어서는 민간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SDGs의 수용 정도, 경제협력에 대한 강조 정도에 있어 외교부 기관과 경제부처(기재부와 국토부) 기관 사이의 온도 차이가 나타남

- 외교부 산하의 KOICA는 SDGs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한 ODA 전략을 가지고 있음
- 반면에 EDCF, KSP, 국토부 ODA 사업은 일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를 핵심목표로 수용하기 보다는 선언적인 성격이 크며, 오히려

민간 부문 경제협력에 기여하는 데에서 ODA의 역할을 찾고 있음

- 기관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용의 차가 큰 것은 기본적으로 외교부 산하기관과 기재부 산하기관 및 국토부의 역할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외교부는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성과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반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경제부처로서 공적개발원조가 우리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

□ 공적개발원조 및 경제협력에 있어 국토·도시분야 비중이 크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

- KOICA는 8개의 중점 분야별로 중기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토·도시분야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EDCF와 KSP 분야별 전략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며, 국토부 ODA 역시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주요 국제기구가 국토·도시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기관(특히 KOICA)도 국토·도시분야 공적개발원조 중장기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5

CHAPTER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사업특성

- 1. 국제비교 분석 | 87
- 2. 국내 사업프로그램 기반 분석 | 91
- 3. 종합 및 시사점 | 106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사업특성

1. 국제비교 분석

1) 분석방법과 자료

-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 OECD는 DAC 회원국들의 유·무상 공여에 대한 분야별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분야별 국제비교가 가능
 - 전체 사업 중 국토·도시 분야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국토·도시 분야의 비중, 세부 분야의 비중을 비교 분석
- OECD에서 제공하는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자료 활용
 - 국토·도시분야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 분야 중 국토·도시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14개 분야를 선별(<표 5-1> 참조)
 - 우리나라 공여액 2009년~2017년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 분석

표 5-1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중 국토·도시분야 구분

코드번호	항목
14040	하천 개발
14050	폐기물 관리 및 처리
16030	주택정책과 행정
16040	저렴 주택
21010	교통정책 및 행정관리
21020	육로 운송
21030	철도 운송
21040	수상 운송
21050	항공 운송
21061	저장(storage)
21081	운송 및 저장 교육과 훈련
32310	건설정책 및 행정
43030	도시개발과 관리
43040	농촌개발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최종접속일: 2019.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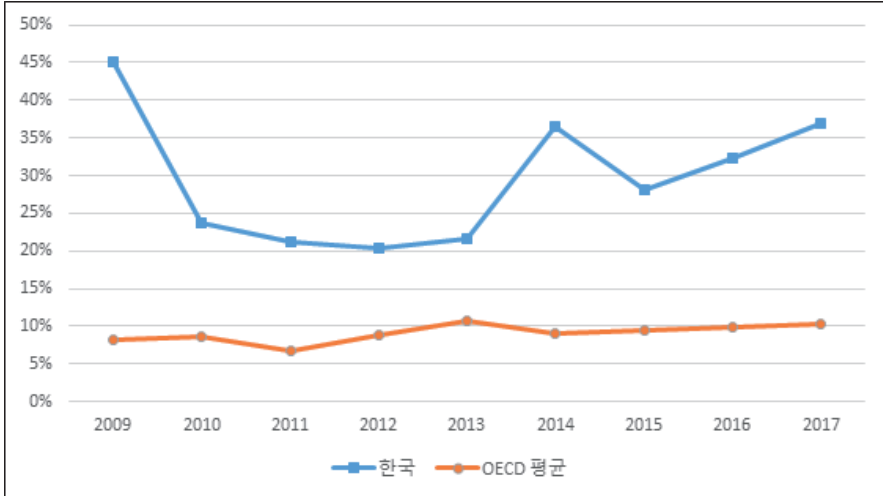
2) 분석결과

□ 국토·도시분야의 비중

- 한국의 국토·도시분야가 전체 공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이르며 이는 10% 내외인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음
- 2010년 이후를 보면 한국의 국토·도시분야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7%에 이룸
 - OECD 국가평균의 국토·도시분야 비중은 10% 내외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임

그림 5-1 | 전체 대비 국토·도시 분야 공여금 비중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로 저자작성.

□ 세부부문별 구성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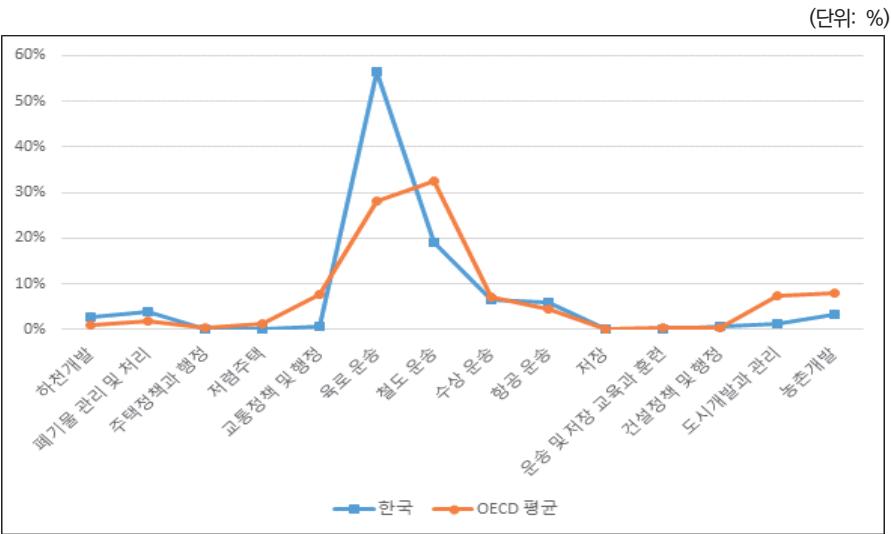
- 국토·도시분야 세부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절대액과 비중에서 육로운 송과 철도운송 부문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2009~2017년 합산 총액 기준)
 - OECD 국가평균도 육로운송과 철도운송의 공여액이 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우리나라는 특히 육로운송(도로)의 공여액이 크며, 이에 비해 OECD 국가평균은 철도운송의 비중이 더 큼
- 우리나라는 주택정책, 저렴주택, 교통정책, 도시개발 등 정책공유 부문에 있어서 OECD 국가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을 보임
- 이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이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건설사업에 치우쳐져 있으며, 정책공유, 역량개발 등의 분야가 취약함을 의미

표 5-2 | 국토·도시분야 세부부문별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구분	한국		OECD 평균(한국포함)	
	만불	%	만불	%
하천 개발	151.1	2.6	38.3	0.9
폐기물 관리 및 처리	226.6	3.9	63.6	1.8
주택정책과 행정관리	7.3	0.1	13.5	0.4
저렴주택	3.3	0.1	42.1	1.1
교통정책 및 행정관리	32.3	0.6	305.9	7.7
육로 운송	3312.5	56.4	987.6	28.3
철도 운송	1111.3	18.9	1847.8	32.5
수상 운송	376.4	6.4	303.8	7.0
항공 운송	353.4	6.0	186.8	4.5
저장	0	0.0	1.8	0.0
운송 및 저장 교육과 훈련	1.1	0.0	15.9	0.3
건설정책 및 행정관리	36.2	0.6	10.3	0.2
도시개발과 관리	78.6	1.3	244.0	7.5
농촌개발	187.2	3.2	268.1	8.0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로 저자작성.

그림 5-2 | 국토·도시분야 세부부문별 한국과 OECD 공여 비중 비교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로 저자작성.

2. 국내 사업프로그램 기반 분석

1) 분석방법과 자료

□ 분석방법

- 시간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
 - 2010년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하고(2009년 11월)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시점으로 개발협력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이해할 수 있음
 - 국토부 인프라 ODA 사업의 경우 2013년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점으로 분석
- EDCF, KSP, KOICA, 국토부 ODA 프로그램별로 국토·도시 분야 사업을 구분하여 이의 비중과 세부 내용 분석
 - EDCF, KSP, KOICA 사업은 국토·도시분야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업 명칭을 기준으로 도시개발, 인프라 관련 사업을 국토·도시분야로 간주하여 분석, 국토부 인프라 ODA 사업은 사업 전체가 국토·도시 분야에 해당
 - 유상원조(EDCF)와 무상원조(KSP, KOICA, 국토부 ODA)는 원조자금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논의함
-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사업을 세부분야, 수원지역, 사업유형별로 분석하여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전체적인 추이와 특징 분석
 - 세부분야는 중분류로 ① 국토, ② 도시, ③ 주택·토지, ④ 인프라, ⑤ 공간정보로, 세분류로 ① 국토·지역계획, ② 산업단지, ③ 도시정책, ④ 신도시, ⑤ 스마트도시, ⑥ 도시방재, ⑦ 주택, ⑧ 토지, ⑨ 일반·교통, ⑩ 도로·철도, ⑪ 폐기물, ⑫ 기타 인프라, ⑬ 공간정보로 구분
 - 수원지역은 ① 아시아, ② 아프리카, ③ 중남미, ④ 중동·CIS, ⑤ 기타로 구분
 - 사업유형은 ① 시설건설·개선, ② 기자재지원, ③ 엔지니어링 서비스, ④ 정책자문, ⑤ 마스터플랜·계획수립, ⑥ 시스템·기술개발로 구분

표 5-3 | 국토·도시분야의 세부분야/수원지원/사업유형 구분과 그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중분류	세분류	
세부 분야	국토	국토·지역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광범위한 지역 대상 계획사업(단위사업계획 제외)
		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 관련 사업
	도시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 도시 차원의 정책개발사업
		신도시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개발 관련 사업
		방재	재해 대응 및 예방 관련 사업
	주택	주택	서민주택정책 등 주택 관련 사업
		토지	토지구획정리 등 토지 관련 사업 (토지정보화 사업 제외)
	인프라	일반교통	대중교통, ITS 등 교통 관련 사업(공항, 항만 제외)
		도로·철도	도로 및 철도 관련 사업
		폐기물인프라	고형폐기물처리장 등 폐기물 관련 인프라 사업
		기타 인프라(공항, 항만 등)	공항, 항만 등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인프라 사업
	공간정보	공간정보	지도제작, 토지정보시스템 등 GIS 관련 사업
수원 지역	아시아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남미		중미·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
	중동·CIS		중동·중앙아시아·CIS 국가
	기타		CIS 외 유럽 국가 및 타지역
사업 유형	시설 건설·개선		인프라 건설 또는 개선 등 물리적 건설사업이 포함된 사업
	기자재 지원		중장비 지원 등 건설사업 없이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등의 서비스 제공사업
	정책자문		개발전략 등 정책 수립 및 개선 관련 사업
	마스터플랜·계획 수립		단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혹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스템·기술 개발		공간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또는 기술 개발 관련 사업

자료: 저자작성.

□ 분석 자료

-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사업특성 분석을 위해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EDCF, KSP, KOICA 국별협력사업, 국토부 인프라 ODA 사업의 자료 분석
- EDCF 국가별 사업현황은 EDCF 공식웹사이트(www.edcfkorea.go.kr)에서

사업별로 사업명, 수원국가, 승인액, 승인연도 자료 수집

- 1987년부터 2018년까지 EDCF는 총 376건의 사업, 152억불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2010-2017년에 승인된 175건의 사업을 분석

- EDCF의 사업비는 OECD 기준에 따라 증여등가액(지출액-현재가치로 환산한 원리금)으로 산정함

- 사업명을 기준으로 세부분야, 수원지역, 사업유형 자료 구축

• 기재부 KSP 사업목록을 활용하여 KSP 사업현황을 분석(기획재정부, 2019)

-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24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 중 2010-2017년에 수행된 447건의 사업을 분석

- 사업명을 기준으로 세부분야, 수원지역, 사업유형을 자료별로 입력하였으며, 세부 주제가 다분야일 경우, 다수 세부주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입력

- 사업별 예산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2016년까지의 사업은 연도별 평균 사업액(총 예산/총 사업건수)으로 사용하였고, 2017년 사업은 사업별 금액을 사용

• KOICA 사업현황 분석을 위해 KOICA 통계조회서비스(stat. koica. go. kr)에서 2010-2017년에 수행된 2,137건의 국별협력사업(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자료를 수집

- 다년도 사업을 착수년도를 기준으로 1건으로 처리하여 543건의 사업 분석

- 사업명을 기준으로 세부분야, 수원지역, 사업유형 자료 구축,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총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함

• 국토부 내부 인프라 ODA 사업목록을 활용하여 2013-2017년에 추진된 32건의 국토교통부 인프라 ODA사업을 분석(국토교통부, 2019)

- 사업명을 기준으로 세부분야, 수원지역, 사업유형 자료 구축

2) 종합분석

□ 국토·도시부문 사업 프로그램별 현황

- 사업 프로그램 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건수는 EDCF, KSP, KOICA 사업이 대체로 100건 내외로 유사하며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32건임
 - 금액은 EDCF가 92.5%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이는 EDCF가 유상원조사업으로 다른 무상원조 사업과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며, 동시에 사업규모가 큰 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무상원조사업 중에는 KOICA 사업의 금액 누계가 상대적으로 크며, KSP는 정책공유사업의 특성상 단위 사업당 금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4 | 사업 프로그램 별 총건수와 금액 (2010~2017)

구분	건수 기준		금액 기준	
	건수(수)	비중(%)	금액(백만불)	비중(%)
EDCF	58	23.5	3,575.3	92.5
KSP	95	38.5	30.9	0.8
KOICA	71	28.7	244.1	6.3
국토부 ODA	23	9.3	15.5	0.4
계	248	100.0	3,865.7	100.0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 사업 프로그램별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인프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특히 EDCF와 국토부 사업은 인프라의 비중이 높으며 KSP 사업은 국토분야 사업의 비중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 35% 내외를 차지
- 사업 프로그램별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EDCF는 시설건설, KSP는 정책자문, KOICA는 시설건설, 국토부는 계획수립의 비중이 높아 각 사업의 특성을 잘 보여줌

표 5-5 |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사업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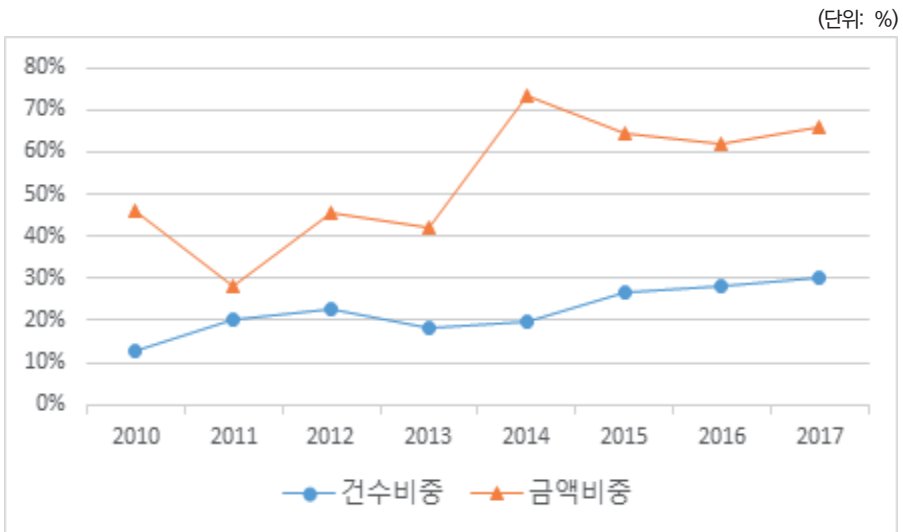
구분		EDCF	KSP	KOICA 국별협력사업	국토부 인프라 ODA사업
사업유형		차관, 집합투자기구 출자, 협력사업 채무보증, 민자사업법인 출자 등	국가정책자문사업,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사례연구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실적		(1987년~2016년) 53개국 375개 사업에 대해 총 15조 2천억 원을 지원	(2004년~2018년) 79개국, 9개 국제기구와 415건 사업완료	(1991년~2017년) 프로젝트 936건, 개발컨설팅 229건 총 1156건의 사업에 3조 62억을 지원	(2013년~2018년) 총 41건 수행
분야별 지원		(금액기준) 교통 38%, 수자원·위생 17%, 보건 11%, 에너지 9%, 교육 7% 등	(건수기준) 산업·무역 27%, 거시·금융 13%, 과학기술 13%, 재정 10%, 국토개발 7% 등	(금액기준) 교육 35%, 보건 22%, 기술환경 에너지 19%, 공공행정 16%, 농림수산 14% 등	(건수기준) 교통·도로 37%, 수자원 29%, 토지정보 12%, 도시개발 10% 등
국토· 도시 분야 사업 현황 분석 결과	사업건수 합계금액 평균금액	58건/총 141건 35.8억불/총 63.7억불 4,518만불	95/총 444건 0.3억불/총 1.5억불 33만불	71건/총 504건 2.4억불/총 21.5억불 470만불	23건/총 23건 0.2억불/총 0.2억불 67만불
	국토도시 비중	건수 41%, 금액 56%	건수 21%, 금액 21%	건수 14%, 금액 11%	100%
	주요 세부분야	도로·철도 (건수 66%, 금액 73%) 기타 인프라 (건수 9%, 금액 8%)	일반·교통(건수 29%) 산업단지(건수 20%) 국토·지역계획 (건수 15%)	도로, 철도 (건수 23%, 금액 20%) 공간정보 (건수 21% 금액 17%)	도로·철도(건수 26%) 일반·교통(26%), 신도시(13%)
	주요 수원지역	아시아 (건수 78%, 금액 73%)	비교적 고른 분포 아시아(건수 38%) 중남미(건수 31%)	아시아 (건수 66%, 금액 67%)	아시아 (건수 52%, 금액 50%)
	주요 사업유형	시설 건설·개선 (건수 81%, 금액 92%)	정책자문(건수 81%)	비교적 고른 분포 시스템/기술 개발 (건수 34%, 금액 35%)	마스터플랜 수립 (건수 87%)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 전체 사업 중 국토·도시 분야 사업의 비중

-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2010~17년 수행한 총 1,734건 사업 중 248건 (14.3%)이 국토·도시분야 사업으로 구분됨
 -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EDCF사업의 41%, KSP 사업의 21%, KOICA 국별협력 사업의 23%가 국토·도시 분야 사업에 해당함. 국토부의 경우, 100% 국토·도시 분야 사업
- 시기별 추이를 보면 전체 사업 중 국토·도시분야 사업의 건수와 비중은 완만한 상승세에 있음
 - 금액 기준으로 보면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국토·도시분야가 상대적으로 개별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3 | 국토·도시 분야 사업 건수 및 합계금액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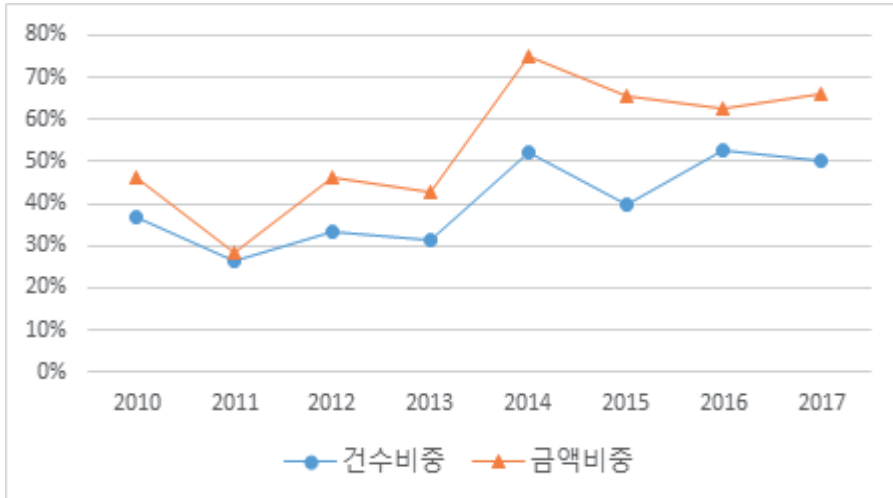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 사업은 2013~2017년 합계

- 국토·도시분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EDCF를 별도로 보면, 금액과 건수에 있어 약 50~60%의 비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4 | EDCF의 국토·도시 분야 사업 건수 및 합계금액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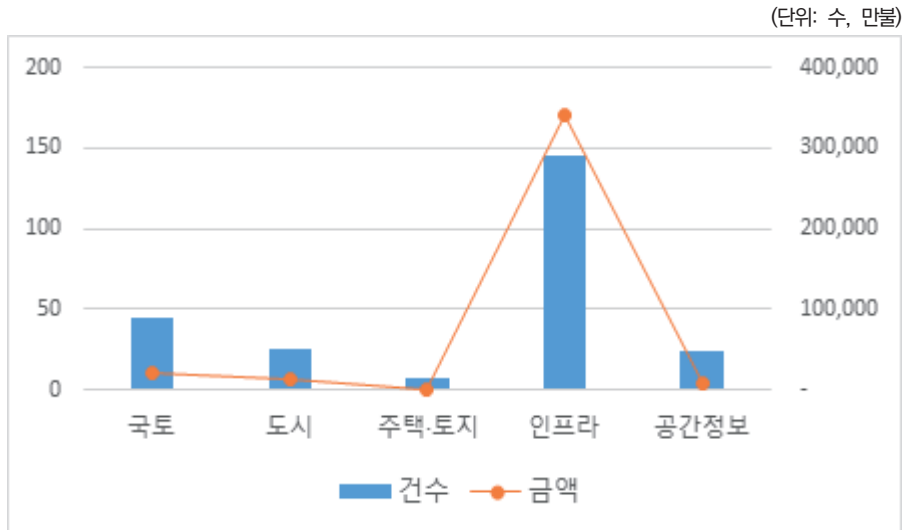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3) 세부현황 분석

□ 세부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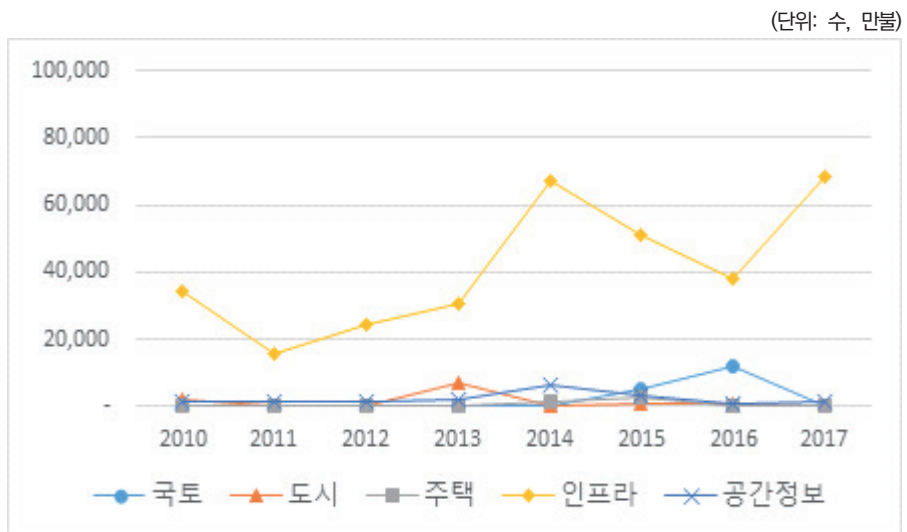
- 국토·도시 분야 사업을 5개 중분류별로 구분해 보면, 인프라사업의 비중이 건수와 금액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국토·도시분야 원조사업이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
- 세분류별로 살펴보면, 인프라 중에서도 도로/철도, 일반교통의 비중이 높음
 - 건수로 보면, 도로/철도, 일반교통 순이며, 금액으로 보면, 도로/철도, 기타 인프라 순으로 나타남
 - 국토지역, 산업단지, 공간정보 분야도 건수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며, 국토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도시, 스마트도시와 그 밖의 주택, 토지 등은 아직 건수와 금액에서 비중이 낮음

그림 5-5 | 사업분야별(중분류) 건수와 금액 (201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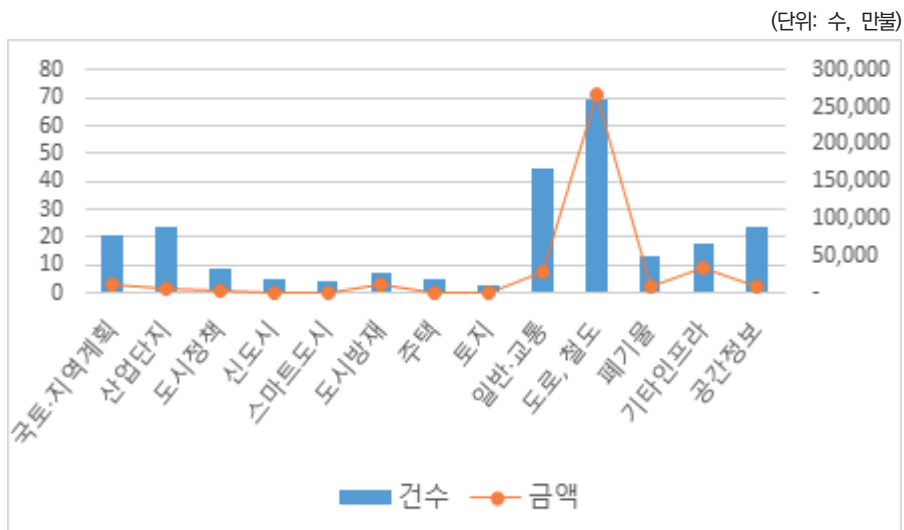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그림 5-6 | 사업분야별(중분류) 금액 추이(201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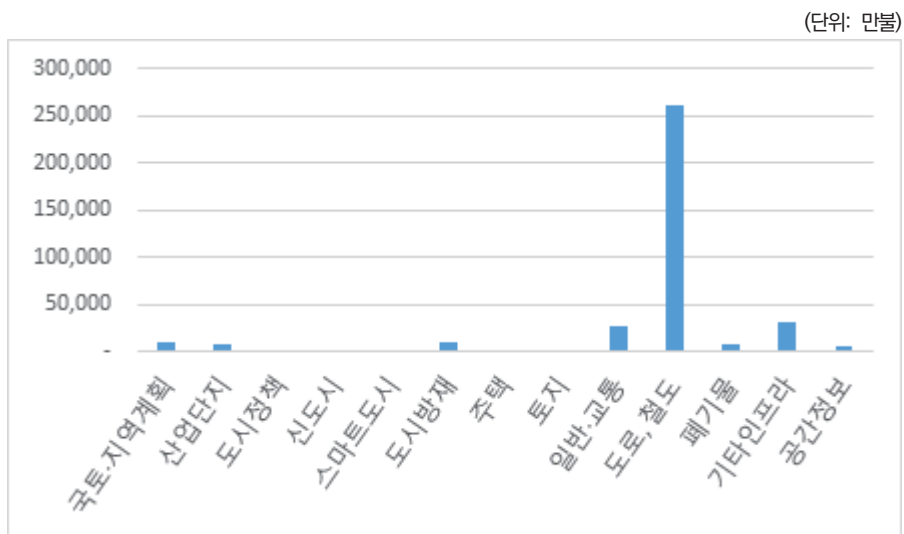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그림 5-7 | 사업분야별(세분류) 건수와 금액 합계(201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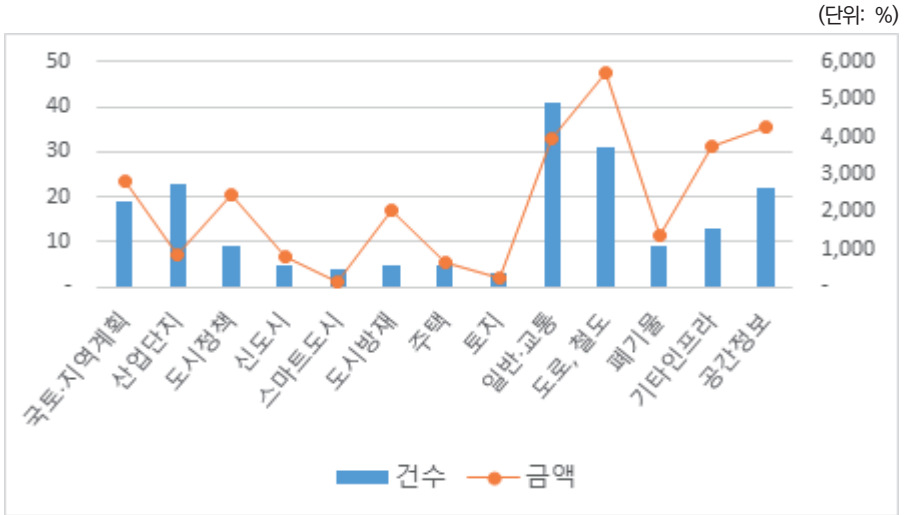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그림 5-8 | EDCF의 사업분야별(세분류) 합계금액 (2010-2017)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그림 5-9 | 무상원조의 사업분야별(세분류) 사업 건수 및 금액합계(201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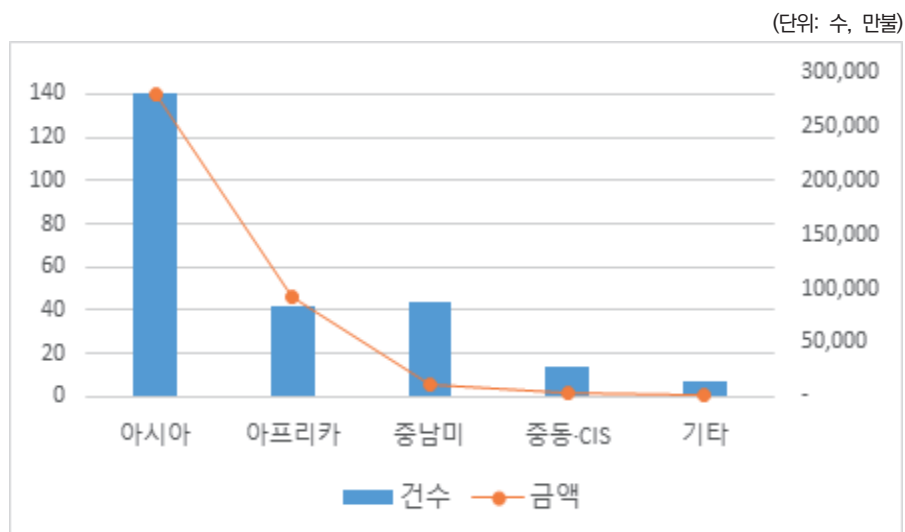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 수원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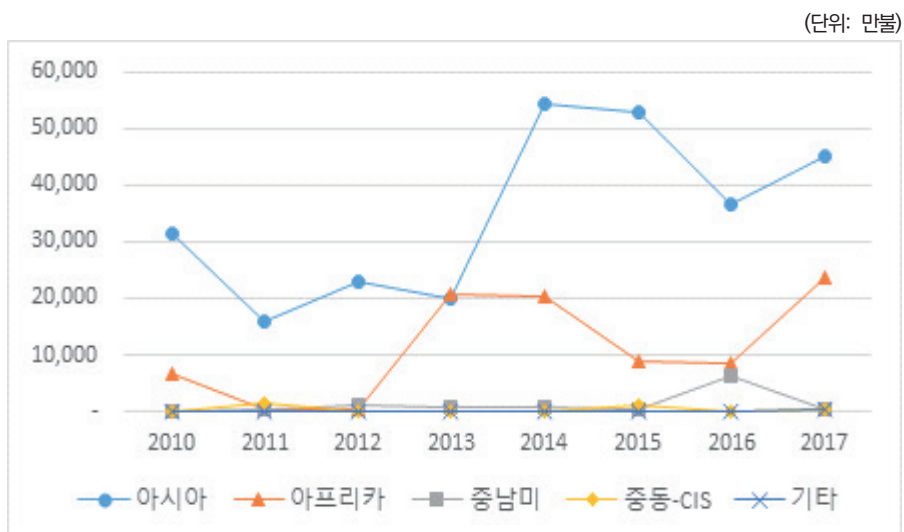
- 수원지역의 비중을 살펴보면, 아시아지역이 5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CIS 지역이 각각 18%, 17%, 7%임
 - 중남미 지역은 건수에 비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사업당 금액이 낮은 KSP 사업이 중남미 지역에 많은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아시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5년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최근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아시아에 원조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전략의 일환
 -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르면, 아시아는 “개도국 수요, 경제협력 관계, 지리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선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상원조 신규 승인의 60%를 배분함(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협력 수요 증대, MDGs 달성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협력 확대” 명시(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그림 5-10 | 수원지역별 건수와 금액합계(2010-2017)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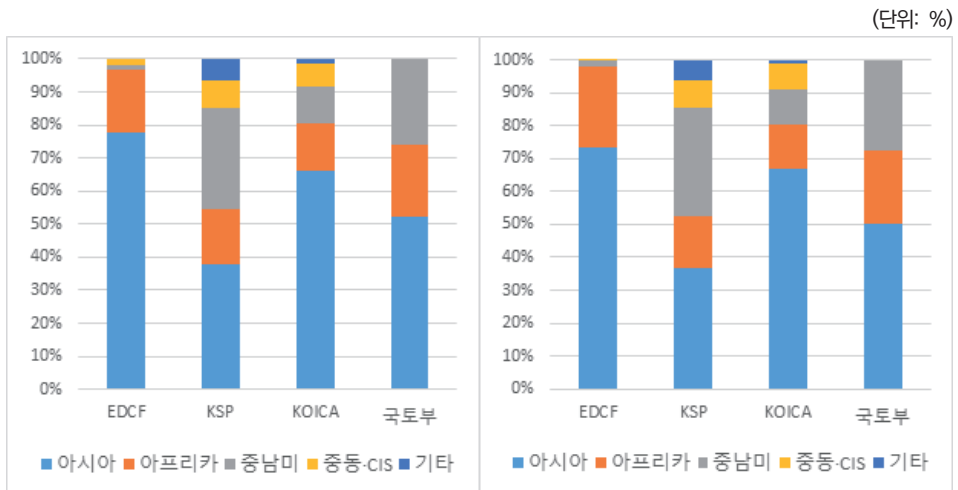
그림 5-11 | 수원지역별 금액의 추이 (2010-2017)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 수원지역을 사업 프로그램 별로 구분해 보면, EDCF가 특히 아시아에서 비중이 높고, KSP는 상대적으로 중남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EDCF는 원조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민간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며, KSP는 정책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개발 경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중남미 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5-12 | 수원지역별/사업 프로그램별 건수(좌) 및 금액(우) 비중(201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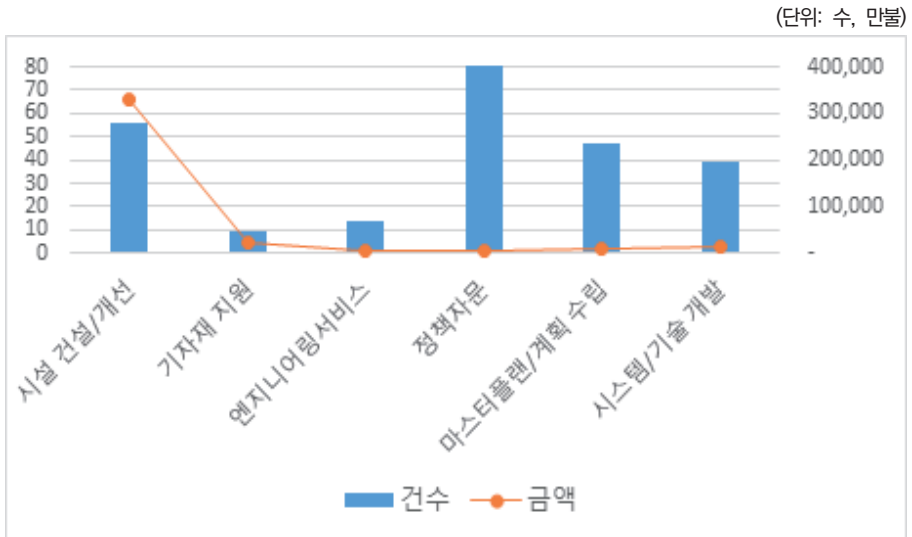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 사업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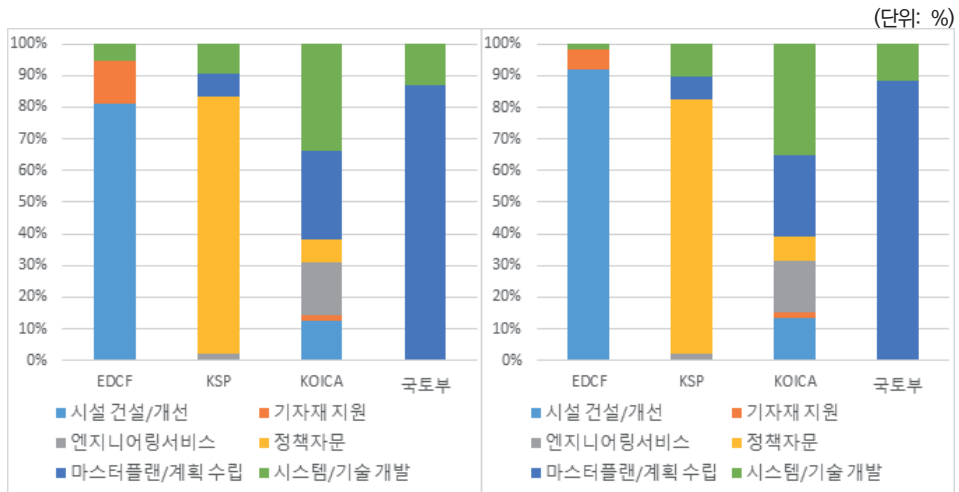
- 사업유형별 현황을 보면, 건수는 시설건설, 정책자문, 계획수립의 순으로 나타나며, 금액은 시설개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책자문, 계획수립, 기술개발 등의 분야는 건수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을 보이나 금액으로는 미미한 상황
 - 이는 시설개선이 자본투자가 많은 인프라사업이 중심이며, 정책자문과 계획수립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당 규모가 작기 때문임

그림 5-13 | 사업유형별 건수와 금액(2010-2017)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그림 5-14 | 사업유형별/사업 프로그램별 건수(좌) 및 금액(우) 비중(2010-2017)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 사업유형별/사업 프로그램별 현황을 보면, EDCF는 인프라사업에, KSP는 정책자문사업에 국토부는 계획수립사업에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 프로그램별 주요사업

- 프로그램 별 사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램별 금액 상위 10개 사업목록을 살펴봄
 - EDCF와 KOICA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두 프로그램이 국토·도시분야 사업 성격을 규정함
- EDCF는 도로, 교량, 철도건설 사업에 대규모사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도 아시아 국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 EDCF는 1위와 9위가 이집트 사업이며 그 밖의 10위권의 모든 사업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함. 특히 베트남의 비중이 높음
- KOICA 사업은 도로, 공항, 지역개발 등의 사업이 고루 분포하고 있음
 - KOICA 사업도 수원지역은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표 5-6 | EDCF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토·도시 분야 사업

사업명	승인연도	국가	승인액(만불)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	2017	이집트	23,603
밤콩교량 건설사업	2010	베트남	17,428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2012	베트남	17,338
떤반~년짜도로 건설사업	2015	베트남	16,564
캔디터널 건설사업	2017	스리랑카	15,341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	2017	필리핀	13,286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2014	미얀마	12,543
흥하교량 건설사업	2013	베트남	10,143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사업	2014	이집트	9,916
만달레이-미찌나 철도개보수사업	2016	미얀마	9,300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표 5-7 | KOICA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토·도시 분야 사업

사업명	승인년도	국가	승인액 (만불)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연장사업	2010	캄보디아	1,150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2016	네팔	1,000
우간다 엔테베 국제공항 시스템 개선사업	2016	우간다	95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해안종합개발 컨설팅사업	2015	인도네시아	95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 타당성 조사사업	2015	우즈베키스탄	700
베트남 교통분야 DEEP 사업	2015	베트남	650
베트남 항강종합개발 지원사업	2014	베트남	600
스리랑카 폐기물 소각플랜트 건립사업	2014	스리랑카	560
캄보디아 항만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수로개선 타당성 조사사업	2014	캄보디아	550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2013	파라과이	549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표 5-8 | KSP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토·도시 분야 사업

사업명	승인년도	국가	승인액 (만불)
아르헨티나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2017	아르헨티나	59.2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 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2018	케냐	58.7
파라과이 국토 부문 발전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 방안	2018	파라과이	47.8
베트남 다낭시 도시철도 개발 계획 및 운영 지원	2018	베트남	47.5
쿠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정책 수립	2017	쿠바	42.9
페루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한국의 경험 전수	2018	페루	42.6
파라과이 국가통합도로교통정보센터 구축	2017	파라과이	42.1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설립 정책자문	2009	우즈베키스탄	41.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 데이터센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018	아르헨티나	40.3
에콰도르 교통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18	에콰도르	38.4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 KSP 사업은 지식공유 사업의 특성 상 사업비가 비교적 적고 균일하며, 지원 국가도 비교적 다양함
 - 타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중남미의 비중이 높음.
- 국토부 ODA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이 많으며, 지원국가도 다양함
 -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은 대부분 사업 규모가 균일하나, 최근 지원되는 일부 개발 프로젝트(콜롬비아 및 베트남 사업)는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음

표 5-9 | 국토부 ODA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토·도시 분야 국사업

사업명	연도	국가	승인액(만불)
메데진 도심교통 인프라 개선사업('18~'20) - 프로젝트형	2018	콜롬비아	1,364
베트남 도로 중온 아스팔트 기술 최적화 사업('18~'20) - 프로젝트형	2018	베트남	182
캄보디아 국가공간정보체계 시행전략 수립사업('18)	2018	캄보디아	91
보고타 신공항도시 MP('17)	2017	콜롬비아	88
뭄바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MP) ('13~'14)	2013	인도	83
라고스 광역교통 MP('13~'14)	2013	나이지리아	83
아순시온 도시교통 MP('17)	2017	파라과이	82
콜롬보 과학기술도시 MP('17)	2017	스리랑카	78
베트남 남부고속도로 교통센터 통합 MP('17)	2017	베트남	78
시엠립 녹색도시교통 MP('17)	2017	캄보디아	77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3. 종합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타공여국에 비해 전체 대비 국토·도시분야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이는 우리의 전체 개발협력사업이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데 기인함
- OECD 평균 국토·도시부문의 비중이 10% 내외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를

넘어서며, 세부분야별로 보면 육로운송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 역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

- 우리의 개발협력이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ODA를 경제협력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적 고려와 신흥공여국으로서 역량개발 등 타분야에 대한 협력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점에 기인함

□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타공여국에 비해 제도 구축 및 역량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음

- 제도 구축 및 역량개발 사업은 SDGs의 가치에 보다 부합하는 사업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동시에 상당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는 어려움이 있음
- 국제비교 항목 중 제도 구축 및 역량개발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주택정책, 교통정책, 건설정책, 도시개발 및 관리 등 제도와 역량개발 부분의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음
- KSP 사업이 지식공유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도시분야의 지식공유 사업이 아직 부족하며, 지식공유가 아직 사업화 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함을 반영함

□ 수원지역은 아시아의 비중이 50~60%로 높게 나타나며, 최근 아프리카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 아시아의 비중은 높은 것은 아시아 지역이 민간기업 진출 등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집중한 결과
- EDCF는 아시아의 비중이 더 높아 70%를 상회함

□ 사업유형별로는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화되지만 시설건설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EDCF의 금액과 건수가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 KSP와 국토부 ODA는 사업성격을 반영하여 정책자문과 계획수립의 비중이 높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국내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정책기조는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에 기반하여 개발협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토·도시분야의 발전경험 공유 노력 부족
- 국토·도시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프라 개발사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를 반영하기보다는 국내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함
 - SDGs도 인프라 조성을 17개 목표 중 하나(목표 9)로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의 인프라 개발사업은 SDGs의 가치를 공유하기 보다는 국내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사업이 인프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전략적인 측면과 역량의 한계 두 차원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ODA를 전략적으로 국내 기업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 진출이 용이한 인프라에 집중되고 있음
 - 한편으로는 개발협력의 역사가 짧아 제도 구축, 역량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식과 네트워크가 부족



CHAPTER 6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1. 기본방향 | 111
- 2. 세부 정책과제 | 115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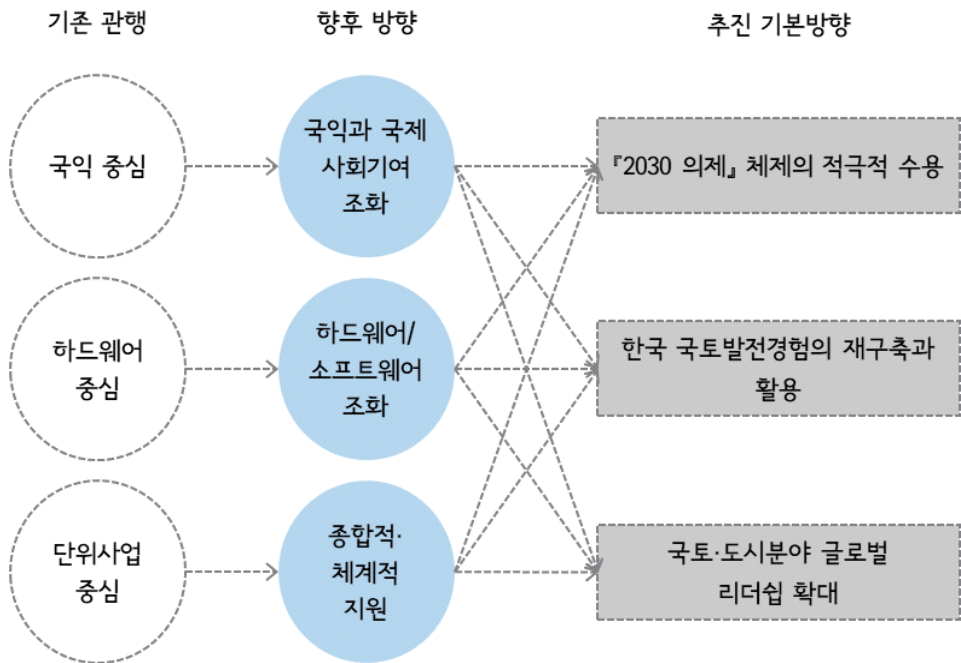
1. 기본방향

1) 정책기조의 재정립

□ 국제사회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 국내 국토·도시분야 정책기조 및 사업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기조 정립

- 국익중심에서 ‘국익과 국제사회 기여의 조화’로
 - 국익과 국제사회에의 기여가 서로 상충되지 않으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치’ 중심의 장기적인 협력기조 정립
 - 국제사회의 의제 셋팅, 다자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고 우리 정책경험 공유 강화
- 하드웨어 중심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로
 - 인프라 사업 중심의 지원전략에서 제도 구축, 역량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인프라 조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
 - 한국 국토발전경험 중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부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공유하고 이 분야에 글로벌 아젠다에 기여
- 단위사업 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 지원’으로
 - 「계획수립-제도 구축(역량개발)-개발사업-국내민간기업진출」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원조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전략 체계화

그림 6-1 | 정책기조의 재정립



자료: 저자작성

□ 정책기조에 기초하여 3개 추진 기본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설정

- 「2030 의제」 등 국제적 규범의 적극적 수용
 - (과제 1)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전략 수립
 - (과제 2)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전략 수립
-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재구축과 활용
 - (과제 3)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연구 기획 추진
 - (과제 4) 한국의 국토발전경험을 활용한 플레그십 프로젝트 기획·추진
- 국토·도시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대

- (과제 5) 국제기구의 국토·도시분야 의제설정에 참여 확대
- (과제 6)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협력사업 활성화
- (과제 7) 「국토·도시 개발협력 연석회의」 개최

2) 추진 기본방향

□ 「2030 의제」 등 국제적 규범의 적극적 수용

- ODA를 좁은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익과 국제사회 기여를 조화시키는 전략 필요
 - 국제사회의 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외교적·경제적 이해 관계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 마련
 - 국익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단기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국가의 브랜드 가치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 도모
- 「2030 의제」의 수용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을 국제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데에도 유리
 -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기조를 기존의 인프라 중심, 국내기업 진출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도시화라는 보편적, 국제적인 규범과 일치시킬 필요
-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중견국가(middle power)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에 부합하는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전략 수립 필요

□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재정리와 활용

- 서구 공여국과 다른 한국의 특징점을 원조 콘텐츠와 원조 방식에 반영
 - 짧은 시기 동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 역할, 제국주의적 유산과 무관한 역사, 비서구권 공여국으로서 원조피로(aid fatigue)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여건 등 우리나라의 강점 활용

-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정부 주도로 국토·도시발전을 성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특징점
- 우리나라 국토발전 경험의 핵심은 법과 제도의 구축, 정부의 적극적 개입, 시장질서와의 조화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도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
 - 공공 주도의 우리의 국토·도시발전 경험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에 부합
 - 반면에 민주주의적 제도의 구축, 시민사회의 참여, 개인의 권리 증진 등에 있어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찰 필요
- 우리의 국토·도시발전 경험이 시공간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오늘날의 개도국 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이해와 재정리 필요
 - 고도성장기 형성된 우리의 국토·도시정책 경험을 국제비교 및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SDGs 및 NUA 구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우리의 경험에 대한 객관적, 학문적 성찰과 아울러 협력국과 공유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기초자료 구축
- 한국 국토발전경험을 핵심 콘텐츠로 하는 시범사업을 발굴·적용함으로써 한국 경험의 공유·확대

□ 국토·도시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대

- UN 기구, 다자개발은행 등의 국토·도시분야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국토발전경험을 확산하고 글로벌 리더십 확대
- 그동안 정부 주도의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확대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2. 세부 정책과제

1) 「2030 의제」 등 국제적 규범의 적극적 수용

□ 국토·도시분야의 개발협력 전략 마련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KOICA의 부문별 계획으로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전략계획을 수립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계획 수립 시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는 주요 분야에 대한 전략 마련 필요
 - 현재 KOICA는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국토·도시분야는 독립적인 분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략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6-1 |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

구분	기존 국토·도시 개발협력	새로운 국토·도시 개발협력
목표	민간기업 진출, 경제 활성화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원조효과성 제고
특징	단위사업, 단기성과, 수익창출 중심	장기 협력, 제도 구축, 지속적 효과 창출
한국경험 활용	개발모델 중심(인프라 개발, 산단개발, 택지개발 등)	제도구축 중심(국토계획, 개발이익환수, 주거복지 등 포용도시 조성 경험)
국제사회 연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연계 부족	UN ESCAP, UN Habitat, MDB 등과 연계하여 국제 공조 지향, 리더십 확대, 원조효과성 증대
핵심사업	개발계획 수립, 도로건설, 댐건설 등	국토계획 수립, 법제도 정비, 기관형성, 인력양성 등

자료: 저자작성

- 전략계획 수립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토·도시분야의 글로벌 아젠다 참여
 -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기조와 전략, 핵심사업 등을 한국의 강점과 SDGs 및 NUA에 기조에 부합하도록 재설정

- 기존의 단기 인프라 개발, 민간기업 진출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원조효과성 제고 중심으로 방향 재설정

□ 중점협력국에 대해 국별 국토·도시 개발협력 전략 마련

- 국토·도시 분야 ODA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 국별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우선순위 설정 및 사업간 연계 부족
 - 국별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기초정보를 구축하고 SDGs 세부 목표에 부합하는 개발수요, 후보사업 파악, 사업우선순위, 사업간 연계전략 마련
- 주요 국제기구는 국토·도시분야 국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단위사업 선정과 평가에 활용

표 6-2 | 주요 국제기구의 국토·도시 국별전략

조직	내용
세계은행	• 국별 「도시화리뷰」를 통해 정책결정자들에게 국가 및 도시 전략을 제시
아시아개발은행	• 국별 도시부문 전략계획(Urban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수립
UN Habitat	• 국별 국가도시정책(National Urban Policy) 수립 지원
OECD	• 국별 국토정책리뷰(Territorial Review) 및 도시정책리뷰(Urban Policy Review) 수행
JICA	•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국의 도시별 발전전략 수립

자료: 저자작성

2)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성찰과 활용

□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연구 기획 추진

- 한국의 국토발전경험을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연구 기획 추진
 - 한국의 국토·도시정책은 고도성장기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늘날 개도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재해석 필요
 - 한국의 경험을 긍정적/부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넘어서서 객관적이고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 한국 발전경험의 종합적 의미에 대한 총론적인 연구와 더불어 지역개발, 도시계획, 토지, 주택, 인프라 등 부문 연구로 확대

표 6-3 | 우리나라 국토·도시 발전경험의 주요 특징

특징	관련정책
경제성장을 위한 관련 정책의 유기적 연계	국토종합계획 - 경제개발 5계년 계획 수립
정부 재정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시장기능의 활용	신도시개발, 도시환경정비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택과 집중	국토종합계획 수립, 공업도시·산업단지 조성
여건변화에 따른 신속한 정책 대응	도시재개발 → 신도시개발 → 도시재생 → 스마트시티

자료: 저자작성

- 관련학회, 연구원, KOICA 간 등과의 개발협력 연구협력 강화
 - 우리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관련 국책연구원, KOICA 등 개발협력 관련 연구 네트워크 구성
 -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공감대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 어젠다 구축에 공동 참여

□ 한국의 국토발전경험을 활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추진

-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기조에 부합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계획수립, 제도 구축, 역량개발 등의 분야에 집중
 -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신규 시범사업 및 수개의 사업을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모델 발굴
- 수 개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하나의 국가에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사업간 연계 강화, 사업효과 제고
 - (예) 국토계획 수립 → 도시관련 법·제도 개선 → 도시계획 수립(방재계획, 스마트시티 등) → 역량개발 지원
 - KOICA 및 KSP와 공동으로 중점협력국(예, 신남방국가)에 시범적용 후 확대

표 6-4 | 국토·도시부문 중점사업의 예

분야	주요사업(예시)
지속가능 도시화 부문	• 국토계획, 도시계획, 지역계획 수립과 정비 • 도시법제 정비 (토지이용, 개발이익환수 등) • 환경 및 녹지 관리 / • 공공 공간 조성
회복력·안전 도시 부문	• 급성장 도시에 대한 방재체계 구축 • 저탄소 및 스마트 도시 구축 / • 폐기물 관리
포용적 도시 부문	• 대중교통중심 도시개발 / • 주거복지 및 공공주택 공급 • 주민참여 도시재생 및 슬럼 등 지역개선 • 여성친화 도시
역량개발 부문	• 도시 관리, 개발관련 기관 형성 • 역량개발 지원

자료: 저자작성

표 6-5 | DFID(영국개발청)의 인도 스마트 도시개발 전략

- DFID는 인도에 20년간 도시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인도 도시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도정부와의 국가적 협력을 추진
- DFID의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성은 대상 도시빈곤의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가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기 전 도시의 구체적인 단위에서부터 규모와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활용
 - 1단계는 도시 내 슬럼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슬럼지역 내 기초 서비스 및 인프라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슬럼지역의 거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이 과정에서 DFID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실행 및 품질관리를 실시
 - 2단계는 도시 단위의 사업접근으로 확장하여 도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도시 행정부의 역량강화와 구조를 개편. 여기서 향상된 역량을 통해 도시는 자체적으로 도시문제 해결 및 빈곤감소를 위한 조직 구성이 가능. DFID는 전문가와 함께 사업실행을 도우며,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NGO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3단계로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국가단위의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가의 제도와 세이프가드의 개선절차가 수반되며, 이는 정부가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등의 새로운 아젠다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 이 시점에 DFID는 국가 및 도시단위의 기술지원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은 도시문제와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자리함

자료: Anon 2013, *Research into Lessons Learnt from DFID India Urban Investments over 20 Years. Final Report.* Oxford Policy Management Asia, New Delhi

3) 국토·도시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대

□ 국제기구의 국토·도시분야 의제설정에 참여 확대

- 국토교통부의 각종 국제행사에 공공외교의 개념을 적용하여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
 - 전통적 외교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매력도 및 신뢰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 부각
 - ※ 공공외교는“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의미 (공공외교법 제2조)
 - 국토교통부는 2018년 총 176회의 국제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 중 장관급 행사는 12건에 이룸(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행사의 영향력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행사의 통합조정 및 브랜드화 필요

표 6-6 | 국토교통부의 주요 국제행사

분야	주요 행사
국제포럼	• 아태인프라개발장관포럼 •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 국제교통포럼
국제컨퍼런스	•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
국제회의	• 한·중, 한·일 도시개발협력회의 •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 • APEC/VSHG, 한·중, 한·인니, 한·인도, 한·알제리 도로협력회의 • 미·일·러·프 협력회의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에서 구성

- 국제사회의 국토·도시분야 SDGs 및 NUA 후속작업에 참여
 - UN Habitat, UNESCO, UN ESCAP 등이 추진 중인 국토·도시분야 SDGs 후속조치 마련,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사업 참여

※ UN Habitat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개도국의 국가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NUPP) 운영 중

※ 국토교통부는 UN Habitat와 함께 미얀마, 이란, 나이지리아의 국토정책 수립 사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이에 LH 등 국내 전문가 참여

- 국내 기관들과 공동으로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등의 국제행사에 공동 기획세션을 마련하여 한국의 국토발전경험과 ODA 정책 공유

• 학계와 시민사회의 국제기구 참여기반 확대 및 관련 전문가 양성

- 그동안 국토·도시분야 국제기구 참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독점하다시피 하였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

- 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 연구프로젝트, 재정지원, 시민사회의 관심제고 등 필요

표 6-7 | 해비타트Ⅲ 진행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의 참여 경험

- 10개 정책단위(policy unit)의 정책페이퍼 작성과정에 국내 전문가 5인 참여 (강명구, 김세용, 박세훈, 조만, 최막중)
- 국토연구원은 정책단위 7(도시경제발전) 분야의 주관기관으로 참여
- 해비타트Ⅲ 대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및 IDB와 함께 사이트이벤트 및 네트워크 이벤트 개최

자료: 박세훈 외(2016)에서 구성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협력사업 활성화

• 국내 전문기관 - 국제기구 - 수원국의 삼각협력을 통한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글로벌 리더쉽과 지식경쟁력 강화

- 단기간에 글로벌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관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필요

- 기존의 국내 정책경험 공유사업을 넘어서서 수원국과의 제도구축, 역량개발, 인프

라 조성 등에 종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필요

※ 국토연구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사업(2019-2021)」 추진 중이며, 향후 유사 사업 확대 필요

- 국제기구와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공동연구 · 공동세미나 활성화하여 국제기구를 한국 경험을 공유하는 매개체로 활용

– 국제기구의 연구사업, 발간사업, 연수사업 등에 참여하여 한국 국토발전 경험 공유

□ 「국토 · 도시 개발협력 연석회의」 개최

- (취지) 국토 · 도시분야 개발협력의 정보공유, 협력 강화, 공감대 구축
- (참석자) 학계 전문가, 관계 기관(EDCF, KSP, KOICA), 국토부, 관련 연구원 및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 (주요 안건) 국토 · 도시분야 개발협력의 정책현안 논의, 국제기구 정책 동향 분석, 연구성과 발표, 협력방안 협의 등
- (연구원 역할) 정부, 민간,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중간자 혹은 허브 역할 수행

참고문헌

REFERENCE



【인용문헌】

- 건설교통부. 2005. 제1차 해외건설진흥 기본계획. 내부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10a. 해외건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장관회의 안전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0b.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
- 관계부처 합동. 2012.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19.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경제활력대책회의 안전자료
- 국토교통부. 2014. 내년도 건설업계 해외진출 ‘정부지원’ 시작됐다. 4월 14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15. 제3차 해외건설진흥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2016a. 해외건설 사업 발굴 위한 개도국 기반 시설 개발계획 사업공모. 1월 20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16b.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 무역투자진흥회의 안전자료
- 국토교통부. 2017. 해비타트 III 의제(The New Urban Agenda) 이행방안 연구. 세종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8. 인프라 ODA 대상사업 모집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92호.
- 국토교통부. 2019.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7월 8일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 2010. 제2차 해외건설진흥 기본계획. 내부자료
- 권구순·김유식. 2016. 한국의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역할 :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새로운 도시의제(NUA) 간 상호 연계성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6권, 4호: 78-108.

-
- 권상철·박경환. 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 그 기회와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권, 1호: 62-88.
- 기획재정부. 201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0주년 기념 및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국제행사 개최. 8월 30일.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7. 지역별 발전현황 진단 및 KSP 추진전략 연구.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2015. Knowledge Sharing Program : KSP 10년사.
- 맹준호. 2019.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기조와 향후 추진 과제. 월간 국토 2020년 8월호.
- 박명호. 2016. 새로운 개발협력: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한국의 개발협력. 2016년 4호.
- 박세훈. 2016.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성립 배경과 의의. 공간과 사회. 26권, 4호: 9-39.
- 박세훈·김태환·김은란·박미선·김수진. 2016. 해비타트 III와 한국 도시정책에서의 시사점.
- 손동필·오성훈.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 분야 대응방향 연구.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손혁상. 2013. 프레이밍이론으로 본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담론 결합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53권 1호: 7-40.
- 안예현·이용우·김중은·유희연·이소영·김은화. 2018.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 오수현·이인호. 2018. OECD DAC의 민간자원동원 측정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윤경효. 2016. 2030 SDGs 와 유엔 해비타트 III 신도시 의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SDGs 와 신도시의제 읽기 세미나 발표자료.

-
- 윤유리. 2018. UN 고위급정치포럼(HL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III. 개발과 이슈 46호: 1-20.
- 이유경·이승호·조영태. 2018.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새로운 도시의제 (NUA) 간 비교연구. 도시설계. 19(3). 91-110.
- 임소진. 2012.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협력효과성으로. 국제개발협력 2호: 11-30.
- 임형백. 2014.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개와 과제. 한국정책연구 14호: 73-102.
- 정지원·송지혜. 2014.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지원·정지선·이주영·유애라. 2018. 개도국 SDGs 이행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혁. 2015. KSP 체계 개선방안 연구(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 주유선. 2019. OECD DAC의 ODA 현대화 현황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가을호. Vol 10. 5-22.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1. 한국국제협력단 20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2. KOICA 2011년 연보.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5a.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5b.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성과지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8. KOICA 2017년 연보.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수출입은행. 2017a.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브로슈어.
- 한국수출입은행. 2017b. EDCF 30년사.
- 한국수출입은행. 2017c.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국익(National Interest)”의 부상.

EDCF ISSUE PAPER, Vol.6 No.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 과제 분석 연구. 세종: 환경부.

홍나미. 2017. 국내 도시개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방향성 :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와 KOICA 도시마스터 플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127-157.

Anon. 2013, *Research into Lessons Learnt from DFID India Urban Investments over 20 Years*. Final Report. Oxford Policy Management Asia, New Delhi.

Asian Development Bank. 2018. *STRATEGY 2030, Achieving a Prosperous, Inclusive, Resilient, and Sustainable Asia and the Pacific*.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2011. *The Engine of Development : The Private Sector and Prosperity for Poor People*. London: DFID.

UN-Habitat. 2016a. The New Urban Agenda: Quito Declaration on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CONF.226/4.

UN-Habitat. 2016b.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Emerging Futures*. Nairobi: UN-Habitat.

UN-Habitat. 2019. *Strategic Plan 2020-2025*. Nairobi: UN-Habitat.

UN-Habitat· OECD· Cities Alliance. 2017. The 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 Implementing the New Urban Agend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UN DESA). 2019.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Highlights*. New York :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UN

ESCAP). 2019a.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19*, Bangko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UN ESCAP). 2019b. *The Future of Asian & Pacific Cities : Transformative Pathways Towards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Bangkok: United Nations.

World Bank Group. 2019. *Financing and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deas for Action 2018*.

World Bank Group. 2019.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 2018 Update*.

【웹문서】

Asian Development Bank. <https://www.adb.org/about/strategy-2030-operational-priorities> (최종접속일: 2019. 12. 13).

EDCF. 공식홈페이지. <https://www.edcfkorea.go.kr> (최종접속일: 2019. 11. 11).

EAROPH 공식 홈페이지. <https://earoph.org/> (최종접속일 : 2019. 11. 1)

KOICA 공식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최종접속일: 2019. 8. 10).

KOICA 브로슈어. http://www.koica.go.kr/koica_kr/1002/subview.do (최종접속일: 2019. 11. 11).

KOICA 연혁. http://www.koica.go.kr/koica_kr/853/subview.do (최종접속일: 2019. 11. 11).

KOICA 통계조회서비스. stat.koica.go.kr (최종접속일: 2019. 11. 11).

KOICA SDG 리플렛. http://www.koica.go.kr/koica_kr/1002/subview.do (최종접속일: 2019. 11. 11).

KSP 홈페이지. ksp.go.kr (최종접속일: 2019. 8. 10).

ODA 정보포털. <http://www.oda.go.kr> (최종접속일: 2019. 11. 11).

ODA 통합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01/L01 (최종
접속일: 2019. 8. 10).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CRS1 (최종접속일: 2019. 11. 4).

The Seventh Asia-Pacific Urban Forum. <https://www.apuf7.org/initiatives/ppsu>
(최종접속일: 2019. 12. 13).

World Bank Group. <https://www.worldbank.org/en/topic/disasterriskmanagement/overview#2>
(최종접속일: 2019. 12. 13).



부록1: 자문회의 결과

일시/장소	2019년 11월 14일 오후 3시 30분 / 서울역 공항철도 Arex-3 회의실
자문위원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 송재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 성장환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외연구센터 센터장) • 이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논의사항	[김경환] • 국토·도시분야 분석에 앞서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체적 여건을 이해해야 국토·도시분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업간의 연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특히 EDCF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EDCF 사업이 SDGs와 연계되도록 제안하는 것이 중요 • 중규모 선진국(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개발협력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들 국가들은 국가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제협력은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송재민] • 제목의 '추진방향'이 누구를 위한 추진방향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즉 연구의 독자가 누구인지 명시 필요 • 국토·도시분야가 SDGs 여러 목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언급 필요. 11번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오류 • 인프라도 SDGs 목표 중 하나 일 수 있는데 이를 SDGs와 괴리된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함 [성장환] • 누구를 위한 SDGs인지 명확하지 않음. SDGs 추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논리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창] • 배경에 연구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상태로는 연구 목표와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움 • 한국이 ODA에 있어서 틈새시장을 확인해야 함. 일본과 중국과 같은 대규모의 ODA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같은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가져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저자 작성

■ 부록2: 한국 국토발전경험 재성찰 워크숍 프로그램

Reconsidering Korea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Experiences: Implic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ince Room 2ndFloor
Koreana Hotel, Seoul
28-29 August, 2019

Program

Day 1: 28 Aug. 2019

9:30~10:00 Reception

10:00~10:20 Opening

- Welcome Address by Hyun Soo Kang, President of KRIHS
- Workshop Brief and Introduction

10:20~10:40 Background Presentation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Project
 - Se Hoon Park, Senior Research Fellow, KRIHS

10:40~12:00 **Session 1: Outlining Urban Transformation in Korea**

Moderated by Seong-Kyu Ha (Professor Emeritus,
Chung-Ang University)

- Governing South Korea's Urban Transition: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Prospect of Cities in the 21st Century
 - Mike Douglass, Emeritus Professor, University of Hawaii
- Urban Transformation with 'Korean Style': Lessons from Property-based Redevelopment by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 Hyun Bang Shin,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and Environment, London School of Economics

12:00~13:30 Lunch Break

13:30~15:30 **Session 2: Korean Model of Urban Development**

Moderated by Won Bae Kim (Former Senior Research
Fellow, KRIHS)

- Asian Emerging Donors and Urban-Industrial Knowledge Sharing: Lessons from Geopolitical Economy
 - Jamie Doucette, Senior Lecturer in Human Geography, University of Manchester
 - Farwa Sial,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Manchester
- Export or Cooperation? :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packaging Urban Experiences in Korea
 - Yehyun An, Associate Research Fellow, KRIHS
- A Multitude of Models: Translating the Korean Urban Experience

-
- Cuz Potter,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 Jinhee Park, Post-doc Fellow, Glob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 International Urban Development Leadership: Singapore, China and South Korea Compared
 - Hyung Min Kim, Faculty of Architecture, Building and Planning,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Julie Miao, Faculty of Architecture, Building and Planning,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Nicholas Phelps, Faculty of Architecture, Building and Planning, The University of Melbourne

15:30~16:00 Coffee Break

16:00~18:00 **Session 3: Policies and Institutions**

Moderated by Mike Douglass (Emeritus Professor, University of Hawaii)

- Korea'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Understanding Its Context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Won Bae Kim, Former Senior Research Fellow, KRIHS
- Exporting New City Developments? From New Towns to Smart Cities
 - Yu-Min Joo, Assistant Professor, KDI School
- Housing Policy and Urban Redevelopment in Contemporary Korea
 - Seong-Kyu Ha, Emeritus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 Land Development Policies in Korea: Structure, Schemes and

Politics

- Seohwan Lim, Former Senior Research Fellow, LH Research Institute

18:00~ Dinner

Day 2: 29 Aug. 2019

9:00~11:00 **Session 4: Actors and Players**

Moderated by Yu Min Joo (Assistant Professor, KDI School)

- Knowledge-Policy Nexus: Policy Research Institutes and Urban Development Regime in Korea
 - Se Hoon Park, Senior Research Fellow, KRIHS
- Engines for Development: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 and their Roles of Urban Development in Korea
 - Jieun Kim, Research Fellow, SH Urban Research Office
- From Commodities to Community Engagement: Localities and Urban Development in Seoul, South Korea
 - Blaž Križnik,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Su Kim, Alumna, Seoul National University

11:00~11:20 Coffee Break

11:20~12:20 **Session 5: Reflection on the Workshop and Future Plan**

Moderated by Hyun Bang Shin and Se Hoon Park

Discussants

Won Bae Kim

Mike Douglass

Cuz Potter

Hyung Min Kim

12:20 Closing and Lunch

수시 19-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연구진 박세훈, 이병재, 안예현, 유희연, 이은우, 권구순, 김유식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인쇄 2019년 11월 31일

발행 2019년 12월 3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220

팩스 044-211-4772

가격 비매품

I S B N 979-11-5898-483-0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9,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시십시오.

박세훈, 이병재, 안예현, 유희연, 이은우, 권구순, 김유식. 201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Policy Direc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Urban Sector for Implementing SDGs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개발협력

제3장 국제기구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추진동향

제4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

제5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사업특성

제6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KRIHS 국토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